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2025년 1월 23일(목) 18시~21시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체제 전환 운동 조직위원회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어떠한 위기인가?
광장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 |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발표 | 어떠한 위기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채효정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연구모임)

토론 |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공성식 (플랫폼C)

주관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연구모임
주최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메일 go.systemchange@gmail.com
홈페이지 gosystemchange.kr

자료집 순서

[발제]

“자본주의와 파시즘 위기를 민중의 민주주의로 넘어서자”

채효정(체제전환연구모임) 3

[토론1]

12.3 계엄-내란, 예고된 체제 위기의 증상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28

[토론2]

저강도 내전사회라는 지성의 비관주의와
사회세력화라는 의지의 낙관주의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35

[토론3]

혐오를 양분 삼아 성장해 온 극우의 20년,
대안이 사라진 현실에 자리한 극우의 효능감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42

[토론4]

민중의 민주주의로 평등-평화-생태 세상으로

공성식(플랫폼C, 공공운수현장활동가조직(추)) 47

[토론1 참고자료]

..... 53

[발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 “자본주의와 파시즘 위기를 민중의 민주주의로 넘어서자” - 어떤 위기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효정 | 체제전환 연구모임

1.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내란의 지속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위기를 전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태가 왜 일어났고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지, 무엇보다 앞으로 어떤 시간의 도래를 예고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공론장에서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논의는 주로 제도 정치적 차원에 집중되고 있다. 사태의 긴박성과 이것이 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과잉 몰입 때문에 오히려 다른 위기들과 중요한 사건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내란 주범의 체포 구속이 국면을 전환하며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이라 생각했던 예측과 달리 극우대중운동의 결집과 반발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내란이 내전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사태에 이르자, 심각한 경제위기, 고물가, 산업재해, 기후재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위기를 비롯해 최악의 항공 재난이라 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중요한 사건들조차, 마치 너무 밝은 조명 탓에 무대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탄핵 무대 뒤로 가려지고 있다. 사태 초기에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고, 그 광장의 힘이 온 힘을 다해 계엄을 저지하고 우파의 준동을 막아내 왔지만, 체포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결정되고 나서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 같다. 그 속에서 모두가 위기의 심각성을 감각적으로는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위기이며,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지,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언론은 라이브 쇼처럼 탄핵 찬성 반대를 보도하고, 사건의 의도와 열개를 유추하는데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 사건들을 둘러싸고 매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와 중대 사건을 가십으로 만드는 호사가들의 평론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누구에 닥쳐오는 어떤 위기인가에 대해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설명과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그에 앞서 경계하고 거부해야 할 관점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금 12.3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을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망상과 망

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한 인격파탄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심리와 성격 내면의 심층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어떤 대통령 후보로부터도 그와 같은 원인을 발생 전에 유추해낼 수 없다. 미치광이, 알콜중독, 망상장애, 주술 심취,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부정선거에 대한 맹신 등등은 이런 행위를 감행한 동인을 이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몰아갈 때 우리는 진짜 원인에 접근할 수 없고, 규명해야 할 것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행위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위기의 역사적 조건과 정치경제적 원인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고, 그 원인과 조건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더라도 다음 윤석열들은 그 구조 속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선과 악, 빛과 어둠, 불의와 정의의 단순 구도로는 현 사태의 복잡한 국면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자들을 악인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 내란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고 극우세력을 색출하여 감옥에 보내면 사회는 안전해질 것인가. 명백한 악인인 ‘빌런’을 제거함으로써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해피엔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하다. ‘사회 혼란 세력’에 대한 박멸의 논리는 노동조합과 좌파, 반체제적 사회운동 세력을 향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극우인가가 아니라, 누가 극우가 되는가이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이다. 어떤 사회가 괴물을 만드는가.

둘째,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도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를 아무리 뜯어고치고,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위기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지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단적으로 한 가지 사례에 의해서도 간단히 기각된다. 지금 지난 세기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요, 민주 정치의 표본처럼 말해졌던 서구의 선진국들, 대부분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정치 위기가 한국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세력의 부상은 훨씬 더 빨리 나타났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안 붕괴’ 사태를 보면 한국이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제도의 한계로부터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토대와 구조 변동 및 그와 연동된 사회적 권력 관계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 제도에 대해 물어야 한다면, 평범한 시민을 폭도로 만드는 제도들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극우세력이 부상한 원인을 보다 정치경제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같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모두 궁금하면서도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 글은 그 까닭을 -각 단계의 자본주의 체제 변동에 조응하는 정치체제의 변동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묻고자 한다.

다음 문제는 비상계엄과 그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행동이 ‘독재 대 반독재’, ‘반민주 대 민주’라는 낡은 구도 속에서 재규정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비상계엄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임은 분명하다.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로 즉각 인식했고,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누구의,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위기는

기득권 질서의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 실제 의미는 법률준수, 헌정질서 수호, 계약, 규칙, 합의에 대한 준수와 이행, 절차적 정당성 등의 의미이다. 즉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주의 위기란 곧 헌정질서의 위기이며 법치의 위기이고, 합의된 규칙과 규범, 제도 준수의 의무에 대한 파기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통치의 위기’라 해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곧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광장에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민주주의’가 국회의원이나 법관들이 강조하는 그 헌정질서, 즉 ‘통치 질서’나 ‘지배체제’의 수호와 같은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지금 무너졌다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되찾아야 할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민중에게 닥친 민주주의 위기와 지배계급에게 닥친 통치위기를 구별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부자의 민주주의와 빈자의 민주주의는 구분되지 않고, 자본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원하는 민주주의도 구분되지 않으며, 그럴 때 대부분 후자는 전자에 의해 흡수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정상과 비정상, 질서와 무질서, 안전과 불안전이라는 대립항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자에 의해 후자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탄핵 가결 직후, 조속한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정 안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국민의 힘에 제안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국정협약체가 그들이 말하는 정상성의 회복이라면, 그 정상 상태란 결국 기존의 양당 지배 체제에 다름 아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도 현재의 무질서와 혼란이 수습되고 다시 사회가 질서를 되찾고 개인들도 일상의 안정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상성이 또 다른 독재에 의해 회복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질서가 구질서에 의해 복구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안전이 경찰력에 의해 수립되는 것도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정상성, 질서, 안전이다. 지금 사회운동은 극우세력의 무차별적 폭력도 저지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강화될 국가의 물리적 사법적 폭력도 저지해야 한다. 사회 질서 붕괴의 수습 대안이 그 붕괴를 야기한 질서의 현상유지로 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회의 질서란 것이 어떤 질서일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질서 회복’이 아니라 사회를 이렇게 무너뜨린 질서에 대해서, 더 궁극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조직하는 ‘자본의 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혼자라는 고립감과 경쟁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의해 지탱되어 온 질서였다.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포획하고 탐식하며 우파 포퓰리즘과 극우 정치가 성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포획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고 있고, 어떤 위력을 가진 존재나 집단의 보호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불안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배워가고 있기도 하다. 그런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 불안을 ‘독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듯이, ‘시장의 질서’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남태령의 경험은 그 불안을 안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 작지만 소중한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그 가능성은 좌절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현실성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지배체제가 안정을 되찾으면 거리의 불복종 시민들과 민주주의자들은 ‘혼란, 무질서, 사회불안 세력’으로 다시 정의될 것이다. 탄핵이 마무리되면 다시 대의민주주의의 질서와 규칙이 강요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즉 탄핵이 구질서 회복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 이후의 과정을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광장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계엄령이 웬 말이나”고 한다. 그리고 비상계엄 시도를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한, 우리는 그것의 ‘시대적 배경’을 읽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은 시대와 맞지 않는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21세기 자본주의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이 글은 후기 자본주의 축적위기 속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상 정치와 국가 폭력성의 증대, 파시즘의 출현 등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번 사건을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사태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과 민주정치라는 -환상에 불과했던 - 모순된 결합체의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파산 위기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내란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 이것은 어떤 위기인가 - 자본주의가 만든 민주주의 위기

(1)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계엄이 민주주의를 다시 불러낸 것은 분명하다. 비상계엄령은 잊고 있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웠다. 그것이 87년에 수립한 제한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라 해도, 법에 새겨놓은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합의조차도 언제든지 기각되고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분명히 각인시켜주었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겨난다. ‘자본주의가 돌아올 때마다 사회주의도 함께 돌아온다’는 말처럼, 민주주의도 독재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돌아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주의들’이 돌아온다고 해야 할 것이다. 광장이 열리고 있고, 그 광장에서 새로운 연대의 전선을 만들어내려는 자생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도 -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해도 - ‘민주주의의 시간’이 도래하는 순간임은 분명하다. 엇그제까지 ‘주체가 없다’ ‘민중이 없다’ 탄식하며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회의하던 사람들도, 그 ‘사라졌던 민중’이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한편 민주주의는 언제부턴가 지루한 말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옛날만큼은 가슴이 뛰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8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 운동의 목표는 비교적 단일했고 선명했다. 87년 민주화 투쟁까지 한 걸 같이 그 목표는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였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에는 ‘윤석열 탄핵하고’ 다음이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하고, 그 다음이 비어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계엄 이전의 퇴진 운동은 지지자를 넘어서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했

으며, 민주주의 투쟁의 성격도 갖지 못했다. 계엄 이후의 퇴진 운동에는 다른 성격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도 민주당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고, 자본의 목표는 시장을 위해 작동해야 하는 법질서와 정치 체제의 정상적 작동일 것이다. 체제 전환 운동으로 모인 주체들은 내란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란 이름을 가까스로 만들어 내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퇴진 이후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도록 정권교체가 목표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탄핵을 넘어 우리가 쟁취해야 할 세상에 대한 ‘이름’과, 이 투쟁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제전환운동은 그나마 “윤석열 탄핵하고 평등 세상으로”, “윤석열 탄핵하고 세상을 바꾸자” 등 그나마 탄핵 너머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수많은 요구들이 수많은 깃발 속에서 펄럭이고, 집회마다 주옥같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요구들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과 운동의 ‘좌표’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과연 ‘민주주의’가 다음 사회로 가는 좌표로서 중심에 놓고 있는 지도 잘 모르겠다. 사회 변혁에 대한 민중의 열망과 새로운 역동성이 감지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목표는 좀처럼 ‘윤석열 퇴진’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고 있지만, 그 광장에서조차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좀처럼 살아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¹⁾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 시간’은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탄핵 집회에서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연사들의 발언을 통해 빈번히 등장하고,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이나 수호를 말하지만, 그때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각자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87년 ‘독재타도 민주쟁취’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의 그 민주주의도 각자가 품은 뜻은 달랐을 것이다. 직선제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하나의 타협안이었다. 이후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담론은 그 87년의 민주주의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의 틀에 갇혀,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다른 민주주의를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곧바로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대안은 없다’는 슬로건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에서도 대안적 체제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상상력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에서 체제유지적 민주주의로 바뀌었으며, 결국 진부해졌다.

민주주의란 말이 진부한 말이 되고 만 또 다른 이유는 냉전 종식 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되었던 대항 개념들이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독재, 파시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위치했던 대항 개념을 대표하는 현실의 정부나 국가, 단체가

1) 어떤 면에서는 지금 광장의 중심 개념은 ‘연대’인 것 같다. 특히 남태령 연대투쟁을 경과하며 ‘연대, 용기, 사랑’은 저항의 힘을 만들어나가는 거리의 깃발에 선명히 새겨지고 있다. 더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이 변화는 ‘희생, 헌신, 전위’ 같은 투쟁의 수직적 위계와 분명히 대비되는 중요한 변화다. ‘연대’가 80년대의 민주주의만큼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독재보다 고립이 더 무서운 시대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너지거나 힘을 잃게 될 때마다 자본주의 블록의 체제 정당화를 위해 동원했던 이념적 수단으로 서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용도 하락했다. 신자유주의는 전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반을 과감하게 공격하고 해체해나갔지만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효용이 다한 민주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 했다. 세계화와 금융자본주의는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일국적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주권과 통치는 분리되었고, 인민주권은 시민참여로 대체되었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 시장 다원주의, 선택 합리성, 거버넌스와 같은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개념화 되었고, 전반적으로 조절과 관리의 수단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훨씬 더 정교하게,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민주주의’로 재구성된 것이다.

9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값이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노동의 표준모델이었으며, 거버넌스가 곧 참여이고, 규칙과 절차의 준수가 곧 민주주의인 것처럼 여겨졌다. 선거에 출마해서 표를 얻고 정부와 의회에서 몫을 차지하고 자릿수에 따라 이익이 분배 되는 정치, 투표와 선호, 득표와 이익이 교환되는 시장주의적 정치 모델이 민주주의와 혼동되었다. 민주당을 위시하여 ‘민주화 세력’이라 불리는 자유주의 세력이 ‘민주’라는 용어를 전유, 참칭, 왜곡 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변질시킨 것도 민주주의 진부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수탈의 파괴적 결과가 나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분출했던 수많은 민중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이전의 한국 민주화 투쟁이 반독재뿐만 아니라 독재를 지원하는 미국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반제국주의 운동의 성격을 함께 가졌던 것처럼, 특히 주변부 식민지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이나 환경주의 운동은 반자본주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이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분리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87체제(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한 민주화 세력이 곧바로 97체제(신자유주의)의 추동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민주주의 이행과 반신자유주의 운동 사이의 분절을 낳은 중요한 원인이었다. 칠레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은 곧 독재 세력이었고,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분리될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신자유주의를 추동했다. 민주화는 제도적 민주화로서 닫힌 역사가 되었고, 민주 정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민주적 자본주의’를 이룩한 성공적 모델로 인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독재 하의 민주주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억압된 자유민주주의로 흡수되었고,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형태로 대립하는 보수 양당의 자유민주주의 주장으로 대표되기에 이르렀다. 이 속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독재 대 민주주의,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와 같은 대항 구도로 재현되었고, ‘과두정 대 민주정, 귀족정(엘리트지배) 대 민주정(민중지배), 사유화 대 민주화’는 물론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 민주주의’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다.²⁾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가 민

2)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로,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서만 바라보는 편

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다시 불러내온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위기는 두 가지 층위에서 다시 구성된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통해 지배해온 지배계급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놓인 피지배 인민대중의 위기이다. 즉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때 그것은 한편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다른 편에서 보자면 그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억압한 진짜 민주주의(민중의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2) 자본주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이렇게 부딪치는 민주주의들은 결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나 과정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적 수평적 권력 구조는 자본주의의 수직적 위계적 권력 구조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지배체제는 기본적으로 과두정에 의존한다. 독점은 독재의 경제적 용어이고, 카르텔과 신디케이트는 과두정의 경제적 번역어다. 제국주의도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거대 기업- 거대 정부 연합에 의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세계지배체제는 훨씬 더 뾰족한 소수의 지배를 보여주는 위계적인 과두체제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는 모순적 결합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즉 자본과 권력을 분리하는 사상과 이론들에 의해 유포되어온 환상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의 결합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선전해 왔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민주적’이라는 정치근대화론 같은 정치 이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발전이 정치발전을 추동한다는 발전주의, 파이 먼저 키우면 분배도 민주주의도 따라온다는 저 유명한 ‘파이주의’도 모두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전제하는 이론들이다. 이런 이론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싶으면 먼저 경제성장부터 하라고 우리를 압박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라는 보자기에 싸서 수출했다. ‘민주주의 전파’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연막이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담론에서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찰했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자유민주주의적 합의들에 주로 집중됨)

민주주의는 그것을 누릴 (경제적·문화적) 수준에 이른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좋은 정치제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민 정치, 폭민 정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은 한국에서도 개발 독재가 경제를 성장시키면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기이한 논리를 정당화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형적인 ‘부자의 민주주의’ 논리인데- 애초에 부자의 민주주의란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불리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선택적 친화성은 어디까지나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모순은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도 수시로 위기에 처하게 한다. (과거에 유행하던 비유를 빌어 말하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치부를 가리는 나뭇잎에 불과하다면, 신자유주의와 파시즘은 그

항 또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관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제대로 해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자본을 권력으로, 권력을 자본으로 호환하는 많은 연구들이 생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관계로부터 자본-권력 체제의 성격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저조했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치경제학과 비판이론의 쇠퇴는 이와 같은 경향을 더욱더 부추겼다.

나뭇잎마저 떼고 벌거벗은 자본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를 세 가지 국면으로 설명한 바 있다.³⁾ ① 분배 정치의 위기(45년 체제), ② 인정 정치의 위기(68 이후), ③ 대의 정치의 위기(90년대 세계화 이후 통치와 주권의 어긋남)가 그것이다. 서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분배를 통한 정의도, 인정을 통한 정의도 모두 실패했다. 60년대 후반부터 서구 자본주의의 성장 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전후 고도성장기 동안 작동할 수 있었던 분배를 통한 사회의 통합적 관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노동계급의 분배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갔고 이 분배 질서 -전후의 계급타협-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 요구도 점점 커져갔다. 68혁명은 서구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진 도전이었지만, 인정 정치로의 전환과 신자유주의적 반격에 의해 진화되었다. 계급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비-주체들의 권리 요구를 수용한 인정 정치는 노동계급의 불인정과 교환되었고 계급 전선의 상실 속에서 90년대에 이르면 혼란스러운 정체성 정치로 귀결되었다. 가장 큰 정치적 위기는 주권과 대의에서 나타난 위기이다.

자본의 권력이 국가를 무릎 꿇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해지면서, 자본의 세계적 통치와 국민국가 내부의 영토 주권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는 일국적 민주주의가 아무리 잘 작동하더라도, 자본이 인민에 의해 승인된 국가의 주권적 결정을 얼마든지 무력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의 참정권이 정부와 의회를 견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정당-지지자, 정부-유권자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는 유권자보다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계급정당과 이념정당이 해체된 이후의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상 대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에 불과하며, 일종의 민주주의 극장을 유지하는 극장정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대의의 근원적 불가능성’이다. 즉,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들을 손보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위기라는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정부(폴란차스), ‘자본의 집행위원회’인 정부도(밀리반드), 어떤 설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공통 법칙이 무너진 세계다.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설명했던 이론과 법칙들이 다 파산하고 있다. 정치이론도 마찬가지다. 베스트팔렌, 브레튼우즈, 알타체제, 월슨 독트린 등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20세기 세계 체제의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국제 협약들이 모조리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는 지금, 그런 체제들과의 연관 속에서 만들어졌던 서구 민주주의론이 이전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도 없고, 현실에서 적용력을 가질 리로 만무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이것은 낡은 것은 사라졌는데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궤위기’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 사이에 ‘가상적인 것’이 지배한다. 정치처럼 보이는 정치, 질서처럼 보이는 질서,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민주주의가. 이 가상적인 것에 대한 불신과 폭로는 혁

3)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 2010.

4) 오늘날 기업 경영자도 정부 관료도 스스로를 전체 살림살이는커녕 자기 관할 영역을 관리하는 협소한 ‘오이코노미코스-관리자’의 위치에도 놓지 않는다. 주어진 자리에서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를 바랄 뿐

명적인 방식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반동적인 방식으로 분출될 수도 있다.

질서들의 붕괴는 사회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며, 점증하는 무질서와 무법화의 경향으로 귀결된다. 자본주의가 다시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간 것 같거나, 중세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는 말은 시장법칙이라는 자본의 천동설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통제 불가능성과 무질서는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다. 이로부터의 설명 불가능성은 윤석열 내란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 곳곳에서 맞닥뜨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을 해명해줄 수 있는 키워드이며, 신자유주의가 더욱 가속화시킨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을 요약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구축되었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와해되었고, 자본과 자본의 관계, 자본과 국가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⁵⁾ 공통된 것은 법, 질서, 법칙, 체계의 붕괴, 즉 무질서로의 경향이다. 현재의 정치적 무질서는 자본의 무질서로부터 흘러나와 사회 곳곳을 잠식시키고 있는 체제 붕괴의 한 단면이다.⁶⁾

그런데 이 위기는 누가 만든 것인가. 낸시 프레이저는 “자본주의의 모든 형태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모순을 장착하고 있다”고 말한다.⁷⁾ 이 모순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DNA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예외 상태가 아니라 이 모순이 자본주의의 금융화 된 현 국면에서 취하는 형태다”(224) “공적권력은 자본 축적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지만, “자본의 무한한 축적 충동은 자신이 의존하는 그 공적 권력을 오랜 시간에 걸쳐 불안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모순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226-227) 자본주의는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꿀꺽 먹어치움으로서 결국 축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인자본주의의 양상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치를 파괴해버리는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공적 권력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 내용을 실행하게 만들며, 분쟁을 심판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이견을 관리하며, 자본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화폐 체제를 지탱하고, 위기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유로 공적 기구와 권력 체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공적 합의 체계로서 작동했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 도살당한 결과, 정치적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도살자들은 트럼프나 보우소나로, 윤석열 같은 인격화된 주체로 현현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다. 웬디 브라운에 따르면, <민주주의 살해하기>의 수행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합리성’으로 등장한 신

5) 이를테면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 국가에 대한 자본의 우위,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

6) 2024년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이 국민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신인민전선과 연합하고도 1당이 된 신인민전선이 아니라 공화당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나 한국에서 양당체제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도 입법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약속을 깨고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양당체제를 더 강화하였던 것 등은 ‘약속과 합의, 규칙을 위반하는 정치’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의 기본 전제이자 시장의 전제이기도 한 신뢰/신용을 허물어뜨리는 자기 발밑을 파헤치는 행위로, 이런 과정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허물어뜨리면서 무질서를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이런 무질서의 경향을 일반적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기에 제도의 미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장석준 옮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자유주의다. 윤석열과 내란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원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의 결과이다. 즉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신자유주의와 싸우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탈환은 불가능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3) 미완의 민주주의 완성의 서사를 이제는 넘어서자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나 완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뉴딜 체제(미국), 45년 체제(유럽), 또는 87체제(한국)라고 불렀던 자유민주주의적 합의에 의해 수립했던 질서와 원칙의 전면적 총체적 붕괴이다. 문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가이다. ‘87체제(6공화국)’을 끝내고 극복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질서 또는 민주적 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또 다른 자유주의 질서로서의 신자유주의다. 한국에서 87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97체제이고 이것은 IMF 비상사태를 통해 수립되었다. 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은 민주주의의 이행과 신자유주의의 저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지만 ‘민주화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추동함으로써 이 과제는 착종되며 저지되었다. 자신들이 적극 도입한 신자유주의 이견만, 신자유주의적 약탈성을 보면서 온건 자유주의자들은 늘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그리워하고 그 시기의 안정된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표본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귀족과 평민이 서로 타협하여 다스리는 -귀족이 평민을 대변함으로써 - ‘혼합정제’는 늘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상(환상)이었다. 지금 같은 잔혹한 자본주의보다 그 정도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의 그 자본주의와 조응했던 민주주의가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

보통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보편적인 이념이 아니라) 1945년 이후 서구에서 발명된 것으로, 특정한 자본주의적 토대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45년 이전 서구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의 지형은 크게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로 구분되었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고 사회주의와 결합하기도 했지만) 독자적인 이념으로서 정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다.⁸⁾ 그런 민주주의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파시즘과 공산주의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대항 개념들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민주주의를 ‘반독재, 반파시즘, 반전체주의, 반공산주의’라고 하는 안티테제로 설명할 때,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나온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에서 그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중에 대한 공포이다. ‘폭민’을 ‘양민’으로 관리하고 혁명을 제도 안에서 관리할 필요성, 즉 인민 권력이 실재도 도래하는 것에 대한 예방과 저지의 목표, 공산주의라는 반

8) 지배 엘리트들에게 민주주의는 어중이떠중이 민중들이 물려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맘대로 떠드는 혼돈의 정치이며, 천박하고 불온하며 불안한 사상에 불과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데모크라시를 ‘하극상’으로 번역했던 것은 엘리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느끼는 어감을 정확히 반영한 번역일 것이다.

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체제 우월성의 프로파간다가 전후 서구에서 지배엘리트가 민주주의를 수용했던 역사적 배경이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사상 속에는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고 -인민의 지배- 그 또한 제거해야 했으므로, 국민, 시민, 주권과 같은 권리를 통해 정치 참여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의제, 의회제도,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와 같은 제도기술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엘리트 정치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인 민주주의는 민중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변형되었고, 이렇게 해서 수립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중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즉 주체적으로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보호복’과 같은 역할을 했다.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지 못하도록 그래서 1,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내전)과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혁명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국가를 통해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와 같은 질서자유주의와 관리자본주의라는 사회적 합의와 계급 타협의 표현이었다고 할 때, 그 타협은 어떤 특수한 토대와 조건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에서 비롯된 대공황이 전쟁을 통해 해소되었던 것, 이후 서구 자본주의가 다시 평평해진 시장에서 전후 복구 경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이 전후 성장기 동안 임금 인상과 분배 정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자본은 여성이라는 내부 식민지로 재생산 비용을 전가하고 제3세계라는 외부 식민지로부터 자원을 조달하고 시장을 확장해나갈 수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수탈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고갈되었거나 더 이상 전과 같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본은 곧바로 타협을 철회되고 사회계약을 파기해나갔다. 지금은 그때는 없었던 위기들까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윤율은 계속 하락하고, 축적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기후·생태위기, 금융·부채위기, 핵·전쟁위기, 돌봄위기로부터의 압력도 점점 증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적 질서 자유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그것도 그것이 가능했던 조건이 모두 없어진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반동적이며 퇴행적인 노스탤지어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수탈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다소 ‘좋은 자본주의 체제’였을 뿐이다. 수탈의 대상인 자연, 여성, 식민지에서 그것은 그때도 가혹한 불평등 체제였다.

전후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체제는 한편으로는 혁명의 여진이 남긴 노동계급의 힘이 일국 내에서 정치세력화 하며 작동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 힘들이 분쇄되거나 누그러졌을 때, 노동권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권리들은 차례로 회수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10부터 전 세계적으로 혁명의 압박이 다시 강력해졌지만, 전후 자본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타협적 분배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력한 긴축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인민을 비참하게 만들으로써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마디로, “전후 구체제의 안정성은 생활수준의 꾸준한 상승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에 의존했다. ...

그것(계약)의 적법성은 ‘공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음 세대는 지난 세대보다 더 번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⁹⁾ 지금은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2008년 이후에는 금융자본주의가 부채경제를 통해 약속했던 유보된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압축적 근대화와 압축적 고도 성장기를 거쳐, 압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압축적인 방식으로 -더 압축적이란 것은 더 폭력적이었다는, 폭력적일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위기의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 후기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와 새로운 국가-자본 동맹 체제

(1)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선수 치는 체제’의 도래

정부와 기업, 국가와 사회를 믿고 사회적 합의와 그에 기반한 규칙 질서 규범들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던 사회에서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현재를 참을 만한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생활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삶이 더 비참해질 것으로 예측될 때, 미래가 봉쇄되고 정치의 약속이 부도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럴 때 반란이 일어난다.

라스무센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선수치는 체제”¹⁰⁾의 도래라고 말한다. 전후 사회국가(복지국가)는 일국적 차원에서 국가를 관리하는 중재 수단을 갖고 있었고, 계급갈등을 무감각하게 하거나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라스무센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한 계급들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로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고 있다.” (라스무센, 68쪽)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악화된 경제를 견디고 있지만 이제 지배계급은 대안을 제시하지도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재난 문자를 보내듯이 파국을 끊임없이 경고한다. 그 경고는 억압자와 피억압자들을 동시에 향한다. “자본주의 자체와 자본주의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부를 위해 쇄스랑이 튀어나오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¹¹⁾ 예방 혁명의 기술은 유화책 대신 점점 더 폭력적 수단에 의존한다. 피에르 다르도 등에 의하면, 더 적은 수의 관리계급이 더 많은 인민의 반란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동원되는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이 ‘내전, 대중혐오, 법치’이다. 내전은 시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자본과 국가 엘리트들이 안전하도록 만드는 수단이고, 대중혐오는 분노하는 힘이 분노의 대상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민중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기술이며, 법치는 사법주의적 처벌을 통해 무력이 아

9) 존 홀러웨이 지음, 조정환 옮김, 『폭풍 다음에 불』, 갈무리, 2024, 362쪽.

10) 미겔 볼트 라스무센 지음, 김시환 옮김, 한울아카데미, 2025, 73쪽.

11) 파이낸셜타임즈 편집부, 2020.12.3., 홀러웨이, 『폭풍 다음에 불』에서 재인용

닌 법에 의한 공포를 조장하고, 정의를 법리의 문제로 치환시키며, 정치를 ‘법적 절차’의 처리 과정에 집어넣어 소거시키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소송전으로 사회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기술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반란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선수 치는’ 신자유주의 통치 양식을 대표하는 전략들의 총화를 보여준다. 비상사태의 선포를 통해서 비상사태는 수립되었다. 내전 상황을 촉발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나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질서를 수립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자행하는 것, 그것은 1970년대 영국에서 대처 정부가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스튜어트 홀은 『위기관리: 노상강도, 국가, 법과 질서』에서 이 시기 영국에서 단순한 노상강도 사건에서 비롯된 치안강화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사회 혼란 세력’에 대한 강력 진압으로 확대되었는지 보여주며, 또 그 사회혼란세력의 범주에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과 노동자와 연대하는 학생시위대가 동급으로 ‘폭도’로 취급되고, 노상강도, 약물중독자, 술 취한 사람, 시위참여자가 같은 층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잡범’으로 다루어졌음을 고발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내부 전쟁은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등 전쟁으로 묘사되며 확장되었고, 다양한 내부 적에 대한 소탕 작전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은 점점 일상화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탄압하면서 사용했던 ‘건폭물이’는 영국에서 노동자 시위를 폭력범죄 소탕 작전과 중첩시켜 범죄화 했던 전략과 동일한 전략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세력의 탄핵 찬성 집회와 민주 시민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동일한 범주에 놓고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진압과 엄벌주의를 똑같이 강조하는 것 역시 반민중적 법질서 강화를 결과로 불러올 것이다.)

비상사태의 정치는 보수 정부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다. 9.11 이후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비상명령을 토대로 ‘애국가 법’을 만들었는데 법안 시효가 다한 후에도 오바마는 ‘국방수권 법’으로 법 형식을 바꿔 사실상 존속시켰다. 팬데믹 비상사태는 많은 나라들에서 과도하게 시민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대로 철회되지 않거나, 법제화되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조치를 비상사태 이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 입법하는 방식은 매우 관행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 해고와 비정규직법 등 IMF 비상사태에서 수립된 예외적 조치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예외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되었던 과정도 비슷한 사례라 할 것이다.¹²⁾

12) 덴마크에서는 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의 외교정책 전통을 깨트렸다. 또 일련의 반테러법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감시권한과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급격하게 늘렸을 뿐 아니라 범죄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후 정부가 바뀌어도 같은 길을 계속 밟았고, 2019년 사회민주당 정부는 테러 혐의가 있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부는 2020년 11월 경찰봉과 최루탄을 사용하여 파리 동부의 난민 캠프를 철거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를 촬영할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 촬영제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이유는 “경찰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노란조끼 운동에 대한 잔혹한 탄압 후에 나왔다. 한국에서 쌍용차 파업에 대한 폭력 진압 이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중무장 경찰, 경찰의 군대화,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대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치안에 군대를 투입 하는 등, 경찰과 군대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으며, 위기의 결과인 고조된 사회적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 점점 더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스무센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정치계급이 노동계급을 진정시켰던 제도적 중재들을 삭감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결과 노동계급은 빠르게 위험한 계급이 되어가며, 이런 전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독재적 측면 증강시킨다.”(라스무센 68) “그런 점에서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결코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지속적인 어떤 전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¹³⁾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예외적인 일탈이 아니라 건폭몰이, 외국인노동자 단속과 추방, 전쟁 도발과 같은 일들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한,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도,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해서도,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파시즘을 불러오는 신자유주의

축적이 자본의 이성이라면, 그 자본의 합리성은 ‘파시즘’의 조건이기도 하다. 1959년 아도르노는 ‘과거 청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강연에서 파시즘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한 적이 있다. 그 당시는 파시즘의 부활 조짐이란 것은 가시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 대다수 사람들이 파시즘은 과거의 역사에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지만,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시즘의 사회적 전제 조건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극우주의의 잠재성이 설명될 수 있다.”(신극우주의의 양상, 9) 아도르노에 따르면, 그 ‘전제 조건’이란 “자본의 집적 경향”이다. 파시즘이 경제와 맺는 관계는 구조화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제로부터 도출되는 파시즘의 구조화된 측면이다. 자본의 집적 경향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신이 전적으로 부르주아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고 또 자신의 계급적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급적 강화하려는 여러 계층들이 영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10)이 증대하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 경향은 집적과 독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과 자본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치열한 계급 내부의 투쟁과 그 결과로서의 승자의 독점과 나머지 한계자본과 패배자들의 탈락이다. ‘약육강식’이라는 ‘시장 합리성’에 의해 계급 내부의 경쟁이 정리된다. 이와 같은 계급 내부 분파의 투쟁은 자본가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경제 하강기에, 즉 축적 위기가 임계에 도달했을 때 가장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때때로 그것은 전통적인 계급투쟁과 다른 방식으로, 적대가 내부를 향하는 계급 전쟁의 모습으로 외화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그것은 “계급 하락의 책임을 그 원인이 되는 장치에 묻는 대신 자신들이 한 때 지위를 누렸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계급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계급 하방에 대한 공포가 상승

13) 2020년 오클라호마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8분 이상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미네아폴리스에서는 경찰서가 불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하기는커녕 ‘반란법’을 발동하고 연방군을 도심에 배치하려고 하였다. 연방군은 동원되지 않았지만 대신 중무장 경찰이 장갑차를 끌고 시위대 앞에 나타났다. 트럼프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앞선다는 예측이 나오자 트럼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극우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이르렀다.

에 대한 열망보다 더 큰 정동으로 작용한다. 인정투쟁이 거꾸로 나타나는 셈인데, 지위나 인정의 취득보다 박탈이 경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우리는 차별을 지지합니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인국공’ 사태나 조국 입시 비리에 대한 상위권 대학들의 더 거센 반발, 돌봄 노동에 대한 교사 집단의 보육과 학습의 구별짓기는 대표적인 계급 내부 투쟁의 사례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다른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여성혐오, 노인혐오, 소수자 혐오, 이민자 혐오, 외국인 혐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논리다. (“저들이 나의 세금과 복지와 소득을 훔쳐간다...”)우파 포퓰리즘은 그 불만들을 접수해서 자기 권력을 위한 지지에 동원함으로써 극우세력의 성장을 돕는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에는 이와 같은 극우적 사고의 문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동안 계급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많이 제출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계급변동이 파시즘이나 극우정치 부상 같은 정치적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 한편, 재난과 위기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대응하지 않을 때, 위기의 현상을 빨리 제거하고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질서를 회복하여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열망은 점점 커져간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반대급부들이 반신자유주의적 요구들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대중적 요구를 전도시켜 수용하며 폭력적 통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현상을 파울로 제르바우도는 경고한 바 있다.¹⁴⁾ 신자유주의의 슬로건이었던 ‘개방, 모험, 자유’는 처음엔 착시를 일으키면서 환영받기도 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 불안정성과 유동성의 실체를 겪고 난 후 매력을 상실했다. 사람들은 다시 불안정과 무질서로부터의 ‘보호, 안전, 통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는 내외부의 불안 요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그를 위해 자유를 일정하게 박탈하더라도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강한 국가’를 다시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은 위와 아래 양쪽에서 모두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보호, 안전, 통제에 대한 국가를 향한 압력도 그러하며 따라서 강한 국가에 대한 요구도 혼재되어 있다. 지배 엘리트는 약탈적 자본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라는 요구를 삭제하고 거꾸로 민중의 반란으로부터 자본을 보호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강한 국가’에 새겨놓는다. 안전사회, 보호 국가, 통제 국가에 대한 요청은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인 사회를 유기체적 ‘전체 사회’로 구성하는 것, 공동체를 면역체로 전환시키는 것과 연결된다. 역사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출현은 파시즘과 공산주의, 사회국가에 대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철저한 거부 속에서 이전의 자유주의를 수정하려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그러하기에 신자유주의와 파시즘, 신자유주의와 전체주의라는 결합이 그 사상적 기원으로 볼 때 얼핏 모순된 결합으로서 보이지만, 지금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파시즘’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다.

1930년대 ‘새로운 자유주의’는 파시즘과 사회주의라는 극단의 사상을 전체주의로서 모두 배격하였고, 7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었지만, 오늘날 후기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강한 정부를 - 경찰국가와 전쟁기계 - 요구한다.

14) 파울로 제르바우도 지음, 남상백 옮김,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다른 백년, 2022.

사상적 측면에서는 파시즘과 상극으로 보이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파시즘과 ‘선택적 친화성’을 보이기도 한다.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해 추동되는 신자유주의다. 미켈 볼트 라스무센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은 국가사회주의 national-socialist 라기보다는 ‘법과 질서’를 시장경제와 통합한 국가자유주의 national liberal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이라니,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현대 자본의 축적 위기는 그런 정치적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서구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파시즘의 뇌관을 한 번도 제거하지 않았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최소한 서구 사회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청산이 잘 이루어졌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일종의 ‘착시’였다. 기후정의운동은 70년대 이후 서구 선진 국가 내부에서의 환경 개선에 환경주의적 착시가 있다고 비판한다. 북반구가 생태적으로 회복되던 시기에 남반구에서는 생태적 파괴가 시작되었다. 위험하고 더러운 산업을 외부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주의적 착시는 민주주의적 착시와 유사하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체제는 다른 지역으로 독재, 전체주의, 내전을 이전시킨 결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밖에서는 독재를 용인하고 전쟁을 방조하거나 지원하였다. 내부의 케인즈주의는 외부의 식민주의를 용인했다. 그것을 승인하는 주체는 ‘정부’였지만 그 목적은 자본을 돕기 위해서였다. 칠레에서는 군부쿠데타를 지원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무너뜨렸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에서 반혁명을 지원하였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이익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국가 안에서는 반전 평화의 정당임을 내세우는 독일 녹색당은 나라 밖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 ‘평화 지역’에서 냉전이 끝나고, 90년대가 지난 후에 오히려 관용주의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막을 내리고, 사회 갈등과 충돌이 격화되며 극우가 다시 정치세력화 한 배경은, 전쟁과 폭력을 외부화 했던 결과가 다시 진원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오염산업과 폐기물을 외부로 이전시켜 놓았어도, 그것이 야기한 기후생태위기가 결국 발원지인 자본주의의 중심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자연으로 외부화했던 성장의 부산물들이 팬데믹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이, ‘문명 국가’ 내부의 민주주의가 국가 외부에서 발생시킨 반민주주의는, 종종 후진국의 야만성으로 묘사되었던 ‘후진적 정치’양상 혹은 그 이상으로 선진 국가들 내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도 군부 권력을 해체하는 데 노력한 것에 비해 자본의 권력 해체에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 자본의 권력은 오히려 더 막강해져갔다. 자유가 억압되었던 나라에 ‘자유화’를 외치며 들어온 신자유주의는 겉으로는 독재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독재 정권의 반공주의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공 자유주의』에서 김동춘은 신자유주의가 “국가 내외부의 반(反)시정(조직노동과 사회주의)세력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공주의와 상당한 공통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⁵⁾ 반공주의의 추동세력은 군부와 극우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4.19혁명 이후 ‘부정축재자 처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활용하며 공동 대응하였고, 이것이 전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의 시

15) 김동춘 지음, 『반공 자유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필요한 책, 2021. 71-72쪽.

작이었다.¹⁶⁾ 한국의 기업가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반자본주의=공산주의’라고 맞받아치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도 군부가 재벌을 부정축재자로 처리하려 할 때, ‘경제위기’와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풀려난 열 세 명의 기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경제인협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1968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부정축재자 처벌이나 정부의 헌납 요구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방어하고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이후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자본가 동맹은 독재 정권에 협력하며 재벌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주도하였다. 박근혜 탄핵 당시 전경련 해체가 강력히 요구되었으나 삼성의 탈퇴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최근 전경련은 다시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경유착’은 80년대까지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신자유주의가 도입한 ‘능력주의 정치’는 국가 경영에서도 ‘유능한 CEO’를 요구하였고, 각종 거버넌스 기구와 로비 창구, 때로는 전문가 영입 등의 형태로 공식 독점을 통해 기업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신자유주의적 노무관리에서 악명 높은 성과경쟁과 ‘저성과자 색출’은 ‘반동분자 색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되었다. 생산성에 방해가 되는 저성과자, 무능력자를 도태시키고 일터와 사회의 모든 곳에 ‘적자생존’의 원칙을 강요하는 기업 논리는 그 자체가 사회우생학을 전파하는 파시즘의 사상적 운상이다.

신자유주의는 반공자유주의를 해체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를 해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처음 등장할 때처럼 우리가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며 자신만만한 상황도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무능력과 부도덕함이 폭로되었으며, 대중은 이제 신자유주의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대안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공주의도 자유주의도 모두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에 집착한다.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월말이면 월급이 들어오는 삶, 최소한 일 년 후, 한 달 후를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과거의 ‘질서가 잡혀있던 사회’의 모습으로 희구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은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최악인 지금보다는’ 나왔던 순간으로 과거를 미화하며 회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상의 공동체를 과거로부터 불러내 미래의 목표로 만들어내는데, 라스무센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가상의 공동체를 향한 전체주의적 집념이라고 설명한다. 그 ‘국가’에 대한 환상의 한쪽에 “자유대한민국”(국민의 힘)이 있다면 다른 쪽에 “민주공화국”(민주당)이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둘이 완전히 똑같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윤소영 류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전선을 교란시키지 않는 것이다. 저렇게 회고된 미래로서의 두 공화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완전히 결별하는 우리가 바라고 살고 싶은 새로운 공화국을, 또는 더 나아가 일국적 공화국을 넘어서는 정치공동체를 상상하고 발명해야 한다.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나라,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딛을 수 없다.

16) “한국의 기업들은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자 처벌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1961년 1월 1일 한국경제협의회를 창립했고, 첫 사업으로 ‘부정축재자처리법’에 공동 대응했다. 이들은 부정축재의 처리는 북한 ‘괴뢰’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동춘, 위의 책, 92쪽)

(3)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사회 정치 위기, 특히 국민의 힘의 극우화와 그것을 견인해 내고 있는 극우대중운동의 성장이라는 현상을 파시즘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파시즘이냐 아니냐는 20세기 파시즘과의 형태적 비교 - 강력한 국가 통합적 지도자, 공포정치, 비밀경찰, 사회의 군사화, 인종주의 등등 - 만으로 판별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결부된 파시즘의 '전제 조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파시즘의 지지 기반이다. 그 전제 조건은 넘치도록 충족되었으며, 기득권을 잃고 경쟁에서 낙오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운영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주고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줄 보육 국가에 대한 인민 대중의 호소가 커지고, 여기에 부응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민주당에 의해서도 국힘에 의해서도 대변되는 것처럼, 파시즘도 두 당이 (다른 방식으로) 함께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모처럼 거리의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가 모처럼 가시화되기 시작한 순간에 극우대중운동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대의 힘으로 분출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지금 거리와 광장에는 앞서 살펴본 신자유주의 통치양식인 '내전, 대중혐오, 법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저 신자유주의 통치양식은 파시즘의 통치양식과 그대로 내통한다. 파시즘이라는 사상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정치를 생물학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를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 집단으로 상정하고, 전체의 몸에 위해가 되는 것은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생각이 장애인과 동성애자를 격리와 치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논리이며, 이것은 이주민에 대해, 빈자에 대해, 비인간에 대해 계속 동일한 논리로 확장되고,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 운동, 노동조합 운동, 반체제적 환경운동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위기 상황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질 때, 즉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어떤 세력이 우리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때, 어떤 비상한 조치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그동안 동물 감염병에 대해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허용했던 논리와도 같은데, 정치의 생물학적 환원이란 그 논리를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IMF 비상사태 당시 허용되었던 구조조정 또한 -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을 만들어냈던 것만큼 - 국가와 한국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다를 바 없는, 예방적 집단해고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감염병 위험의 책임을 병든 동물들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비롯한 자본주의 식품 산업 시스템과 기업에 물어야 하듯이, 사회 속에서 발현하고 있는 위험도 그것을 드러내는 개체가 아니라 그것을 야기한 체제와 구조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함께 고통당하는 생명으로서 연대할 때 인간과 동물의 적대를 생명과 자본의 싸움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듯이, 우리가 놓여있는 같은 고통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불평등의 자리에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민중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데모포비아를 자본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 그리하여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남태령이라는 상징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감각이기도 하다. 계속 커지는 위기 속에서 시시각각 위험이 도래하는 지금, 그 감각을 다른 공간, 다른

장소와 주체들로 더 확장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극우대중운동에서만 배제와 색출, 격리와 박멸의 문법이 발호하는 것은 아니다. 극우 세력의 법원 침입과 난동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것을 또 다른 내란으로 규정하고, 폭도와 폭동을 제압할 강력한 정부와 경찰을 요구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음 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내란의 싹’을 모조리 잘라내고 극우세력(반대세력)을 ‘박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정권은 그 기대에 부응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더 ‘박멸 대상’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사회 혼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는 요구는 아마도 극우세력보다 노동조합과 좌파 등 다른 집단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히 법원 폭동 사태의 주범들은 처벌 받아야 하고, 극우 선동에 대한 관용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과 집행을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반대파에 대한 처단과 박멸의 용어으로써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박멸’이란 용어는 나치가 유대인 절멸에 사용했던 말이다. 실제로 나치는 사회를 좀먹는 해충을 박멸하듯이, ‘살충제’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다. 나치즘과 자본주의는 별개인가? 한국 기업들이 독재 정권에 부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치 시대의 독일 기업들은 나치에 적극 협력하였고, 학살을 용인한 대가로 전쟁 기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현재의 정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체제를 다 파괴하고 무력화시켜버린 식인 자본주의의 결과라면, 우리는 정치를 잡아 먹어치우고 있는 경제, 그리고 그 주체인 자본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이 정치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민주주의, 우리가 탈환해야 할 민주주의 개념은 ‘자본주의와 싸우는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 투쟁의 구도는 더 이상 독재 대 반독재, 반민주 대 민주 세력이 아니라 ‘자본 대 민중’의 투쟁을 표현하는 ‘자본주의 대 민주주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주범으로서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이재용이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가와 자본의 협력 관계를 가시화했다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반도체 특별법 등으로 충실히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에도 자본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았다. 내란 주범을 구체적인 내란 행위 가담자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위기의 핵심 주범인 자본은 정치적 혼란기에 경제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역할과 사명까지 맡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책에 개입하고 국정운영의 공동 파트너로 역할을 해왔음에도, 지금 자본가들은 내란 사태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 오히려 정치적 공황상태를 이용하면서 잇속을 챙기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곧바로 기업 대표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수습과 탄핵 절차 중에도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하고 여야합의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주문했다. 탄핵 절차와 체포에 관심이 집중된 동안 기업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제동 걸리지 않고 무사통과되었고, 농업4법은 남태령 투쟁이 만들어낸 여론의 지지도에 불구하고 부결되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생산되었지만 주로 자본과 노동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정치의 사유화와 정치의 신자유주의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떻게 파쇄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았다. 정치학자들은 정치만 보고 경제학

자들은 경제만 보면서 자본주의 축적 양식의 변화가 정치에서 통치 양식의 변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20세기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의 관계와 21세기 자본주의와 정치체제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고, 21세기 파시즘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를 놓치게 되거나, 잘못 대응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부터 연역해내지 못하고, 계속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시도하지 않고 정치체제의 부분적 개선과 변화만을 시도하게 된다. 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의 논쟁,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의 헌법 개정 논의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가 보장되면 과연 ‘도로 민주당’이 안 될 수 있을까. 극우 정당들이 부상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서 대안 정당으로서 극우 정당이 출현할 수 없었던 것에도 ‘양당체제’라는 구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와 양당체제는 좌파 정당의 원내 진출도 억압하지만 극우 정당의 원내 진출도 억압한다. 물론 양당구도는 보수정당이 극우화를 보이지 않게 촉진하고, 이것이 미국의 공화당과 한국의 국민의 힘 같은 정당에서 트럼프나 윤석열 극우 정치인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안우파나 극우파의 성장은 단지 제도적 빈틈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유주의적 합의에 토대한 민주적 통제력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시기다. 신자유주의도 좌표를 상실하고 보호무역, 강한 정부, 사회 통제 등을 주장하며 자신이 내세웠던 자유의 이념에 반하는 반신자유주의적인 전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대안이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방향도 목표도 없고, 머리도 없는 자본주의의 무질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외된 하층노동계급과 몰락하는 하방 중간계급을 포획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먹히면서 극우 세력이 10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표출된 정치적 위기를 20세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낭만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작금의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에 반하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도’ 허용할 수 없는 상태를 향해 간다.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가 헌정질서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통치 권력은 역설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남아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권리조차 최대한 박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정치지도자의 덕성이나 선의, 제도의 좋고 나쁨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공정한 선거제도 같은 것이나 노동자 보호 조치 같은 법률적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제한적 관점에서’ 자본의 권력을 무력화하고, 도래하는 파시즘을 저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제도, 민중의 통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수립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극우세력의 준동과 야만적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처럼 하나의 정치체제가 그에 조응하는 특정한 경제체제와 함께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단일한 체제가 아니라 ‘수많은 자본주의들’이라는 역사적 자본

주의로 바라볼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되어온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를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후 고도성장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선택적 친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호황기가 끝나고 성장 위기가 시작되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승인된 민주주의적 제도와 권리들을 회수하고 파괴하면서 이전에 수립한 사회계약들을 무력화했다. 금융 지배적 축적이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에서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 관계는 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은 “...빠만 양상하게 남은 형식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민주주의와도 양립할 수 없다.”(밥 제슈, 386)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무엇을 할 것인가 - 저항과 돌봄, 저지하며 전환하기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철저한 위계적 지배 체제이며, 차등과 차별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경영에서 기본 원리이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했던 것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조건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자본의 타협과 허용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모두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질서에 반하여 쟁취해낸 것이기도 하다. 사회운동이 강력할 때 자본은 민주적 권리와 평등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전체 삶의 영역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 제한된 주제로 한정하고, 투표권 같은 축소된 참정권으로 가둬두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가 출현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 그곳이 회사든, 정당이든, 학교든, 시민단체든 -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분출되어 나왔고, 죽은 민주주의라도 다시 생동하는 현실로 되살아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래하는 파시즘은 다시 도래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도래하는 민주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타날 것이다. 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지금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고 있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된 정동은 ‘불안’이었고, 이것을 통해 지배해왔지만, 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치안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연대와 돌봄의 경험이다. 남태령의 연대도 그런 경험의 순간이었고, 우리들의 불안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멈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질서가 돌아올 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돌볼 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은 질서와 규칙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 광장이 우발적으로 열린 공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광장들을 일터와 삶터 곳곳에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비상사태를 계기로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분노와 삶의 경험이 다층적으로 들려온다. 유감스럽게도 그 속에는 듣기에 끔찍한 극우의 목소리도 있다. 언론은 이것을 ‘2030 여성’과 ‘2030 남성’의 대립구도로 만들어간다. 그러나 ‘2030 여성 대 2030 남성’이라는 낯

작한 구도 속에서는 우리는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탄생한 존재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르게 주체화되는가를 사고할 수 없다. 그들은 각자 무엇인가에 눌러서 거리로 나왔다. 양 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눌린 지점에는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극우화하는 청년들은 왜 ‘부정선거’에 그토록 자극받고 ‘중국’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도둑질을 멈춰라’고 쓰여 있는 우파 집회의 피켓은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표를 도둑맞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는 ‘박탈당한 자들의 분노’를 -왜곡된 방식이지만- 표현하고 있다. 표는 그동안 박탈당했던(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목록 중의 하나일 것이다. 가지고 누렸던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 이것이 경제하강기에 계급 하방과 지위 하락에 대한 공포의 핵심이자 파시즘 대중운동의 동력임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 는 그 박탈이 그것이 중국에 빼긴 것, 여성에게 빼긴 것, 이주민에게 빼긴 것, 정규직에게 빼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둑은 따로 있다. 그들의 박탈감은 추격당한 자의 박탈감에서 온 착시다. 나의 권리와 지위는 점점 낮아지는데 상대의 권리와 지위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일 때, ‘그들의 권리 신장 = 나의 권리 하락’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나의 몫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식으로 박탈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박탈이 상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들은 -러스트벨트의 노동계급이나 영국 탄광지대의 광부들, 독일 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 직장을, 수입을, 존엄과 인정을 박탈당했고, 가치가 떨어졌으며, 미래는 봉쇄되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미래를 앞에 두고 불안에 떨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필요한 것은 ‘너희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 ‘너희는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와 같은 말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 진짜 도둑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들을 무뇌아, 괴물, 벌레로 부르면서 ‘박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국 문제를 만든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낙오자들을 처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것은 파시즘의 또 다른 얼굴이다.

박탈당한 존재로서 광장으로 귀환하는 것은 여성 청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잊혀진 존재의 귀환’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박탈당한 이들이 전혀 다른 식으로 각성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래 전부터 차별당하고 박탈당한 존재들은 수많은 모멸의 기억을 갖고 지금 모멸당하는 존재들에게 공명하며 현장으로 달려왔다. 박탈당한 이들의 연대는 ‘지워진 얼굴’을 서로 비춰주며, 세상 속으로 드러냈다. 박탈당한 자들의 연대, 지워진 존재들의 동맹은 여성 청년들만 가능한 일일까. 극우대중운동은 늘 민주주의에서 폭민주의의 위험을 찾아내며 민주주의 불가능성을 말했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연대하는 민중의 민주주의에서만 나올 수 있음을 수많은 연대 투쟁의 현장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확신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항 운동과 돌봄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야 한다.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극우세력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지역공동체와 민중공론장에서 안전한 연대망을 발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소외된 청년과 불우한 노인들이 신천지나 교회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사회운동 단체를 찾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자. 켄로치가 영화 ‘올드 오

크'를 통해 호소하고 갈구했던, 박탈당한 사람들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고향을 빼앗긴 난민들과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함께 체제로부터 추방된 자로서 연대할 수 있었듯이, 부채를 짊어진 농민과 청년도, 월급과 미래를 빼앗긴 여성과 남성도, 우리를 비참에 빠트리는 공통의 적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연대와 돌봄의 거점이 가장 끈질긴 저항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를 초래하고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와 관통하고 있는 시간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태 인식의 공동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시간을 도래하는 역사의 한 계기로서, '역사와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겪는 긴급한 문제들이 기성 질서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기성 질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질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직감해야만 그때에야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임계치에 도달한 대중이 집단행동을 통해 기성 질서를 변혁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결의할 때에만 객관적인 곤경은 주체를 통해 발설된다. 그때에야, 오로지 그때에야, 우리는 결단을 요구하는 비상한 역사적 갈림길이라는 좀 더 거대한 의미에서 위기를 말할 수 있게 된다.”¹⁷⁾ 우리는 지금 그 ‘비상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단기주의적’ 해결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지 않고, 장기 전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한 전략을 하나씩 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반자본주의, 반파시즘, 반제국주의,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반대를 분명한 목표로 수립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확장해나가야 한다. 20세기 대공황은 전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지금 자본의 축적위기와 경제공황도 그 외 다른 자본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주의 철폐’나 ‘반파시즘’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 또한 반공자유주의가 낳은 상상력의 한계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그 상상력의 봉쇄 지점을 돌파해내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고 분리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월러스틴은 과거에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포스트 자본주의가 현 체제의 기본 특징 -즉 위계질서와 착취, 양극화, 불평등, 가부장제 같은 특징-을 그대로 지니는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¹⁸⁾ 월러스틴은 전자를 ‘다보스 정신’으로, 후자를 ‘뽀르뚜 알레그리 정신’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각각 다시 두 가지로 입장으로 나뉜다. 다보스 정신은 강압적 전략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혁신주의적 전략¹⁹⁾으로 나뉜다. 국민의 힘

17) 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246쪽.

18)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성백용 옮김,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창비, 2013.

19)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슬로건을 바꾸고, 끊임없이 바꾸지만 결국 체제를 바꾸지는 않는, 체제를 바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책에서 월러스틴은 ‘녹색자본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라고 들고 있는데, 주류 기후운동이 에너지를 바꿔서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이라는 점,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다보스 체제의 일원이라는 점을 폭로한다. 그런

이 전자의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후자라 할 수 있겠다. 민중 진영도 자본 내부처럼 분열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뿌르투 알레그리 정신에도 자신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세계상을 그것을 성취해나가는 현실의 운동에서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수평주의적 그룹이 있고, 평등을 목표로 하면서도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과정에서는 수직적 조직을 수용하는 그룹이 있다. 내각제나 개헌 논의는 후자로 가게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구체적 전략을 바로 내놓기 전에 역사와 구조 속에서 보다 넓은 지평과 길게 내다보는 전망 속에서 정세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는 작고 구체적인 저항과 행동들이 전체적인 지도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항해도를 가지고 항해할 때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고, 작업 지도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부분을 만들면서도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자가 그 상을 공유할 때, 비로소 동원된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연결하여 공동의 상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사태를 진단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의의 방향을 바꾸고 실천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중요한 한계를 가지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서구 민주주의 정치의 궤적과 그에 대한 분석을 주로 참고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중심부 자본주의에 위치하고 있고, 지배 계급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 전략 속에서 위기의 출구를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정치가 이념적으로나 제도적 차원에서나 대부분 서구로부터 이식된 것이라는 점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퇴행은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현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분명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와 대의정치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념과 제도가 상당 부분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것을 돌파하려 할 때는 다른 곳을 보아야 한다. 어찌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비서구 지역, 주변부, 남반구 지역들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저항과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과 도전들이 더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은 지역에서 변혁 운동도 가장 가열 차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혁명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남아공에서 광산노동자들의 개량적 노동운동을 넘어서는 변혁운동, 브라질에서의 무토지 농민운동, 중국에서 탄압받는 사회주의 운동과 농민공 노동운동, 칠레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등.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뮌주의, 커먼즈 운동들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계속 자본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은 종종 제3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모범이자 교본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이제 한국 민주주의 운동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 민중의 투쟁을 보면서 투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민중주의적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와 같은 민주주의의 힘은 이 땅에서

점에서 사회운동의 힘에 의해 추동되고 뒷받침되지 않는 개헌 절차 또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꾸는 전략'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다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의 길을 내어보자. 국민의 힘은 극우화의 경향을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극우의 준동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는 저항과 돌봄,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중의 민주주의만이 자본의 파시즘과 극우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다른 세상으로의 길을 낼 수 있다.

내용이 길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허구적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그 모순을 충분히 드러냈고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내란 사태를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로 바라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회복을 해결로 제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현재 위기의 성격과 스케일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각각 다른 이론과 원리로 분석하는 분리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의 위기를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가 불러온 정치적 위기로 해석해야 한다. 그 위기는 20세기 초반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자본의 위기 속에서 파시즘과 전쟁이라는 돌파구를 향해 치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이와 같은 자본의 운동과 역사 속에 위치하며, 그동안 용인되어왔던 수많은 비상계엄과 예외상태의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조건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더 강력한 ‘예방 혁명’적 사건들로 돌아올 것이고, 이것은 정권이 바뀔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최대한의 저지선을 만드는 것은 최대한의 안전선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단기 목표로서 체포와 탄핵을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것은 자본주의, 파시즘, 전쟁을 저지하고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 목표가 존재해야 상황이 수습되고 정리되더라도 광장에서 만들어진 힘이 흩어지지 않고 다음 길을 내는 디딤돌을 쌓아나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만 말하고 있는데, 저지 없이는 전환이 있을 수 없고, 저지하고 넘어서는 저지와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다른 세상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현재의 운동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토론1]

12.3 계엄-내란, 예고된 체계 위기의 증상 -이제 정말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할 때

서영표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

아래의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체제로 굳어진 정치 지형을 ‘기형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채효정 선생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양당은 모두 그들이 ‘헌정질서’라고 부르는 ‘게임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정치의 우경화에 따라, 정치이념과 정책 내용에 있어서 좌-우 정당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의 주류는 이미 기득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라는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그랬던 것처럼요. 만약 우리가 그람시의 표현을 빌려 ‘신자유주의적 역사 불력’을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을 완성한 것은 보수당이 아니니 노동당이었고,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었으며, 이 회창이 아닌 김대중-노무현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시장 만능주의는 일상에 파고 들었습니다. 마거릿 대처와 존 메이저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역사 블록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New Labour)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회창이 했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을 반-노동, 친-자본의 정책 노선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졌고, 저항의 주체였을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반동의 수동적, 또는 암묵적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조건에서 아주 얇게만 남은 차이는 과잉된 정치적 수사와 구호를 불러왔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도 서로를 수구와 좌파로 불러주고, 사소한 차이를 화해 불가능한 이념적 정체성으로 과장하는 것이 ‘정치’가 되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정당정치는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을 축소하여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당은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부채질합니다. 흔히들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왜곡된 정치가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의 정치사를 회고한다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불러온 것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소탈한 인간’ 노무현은 휴머니즘의 정서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끼여서 이도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은 지배적인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일상에 뿌리내리게 한 것입니다. 2016-17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박근혜’라는 시스템의 규칙을 벗어나는 ‘예외’ 때문에 발생했지만, 거리

와 광장의 외침은 시스템의 규칙을 한참이나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다시 협소한 규칙으로 축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비전 없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윤석열이라는 더 큰 ‘예외’를 불러왔습니다.

2.

사람들은 지금 제시된 생각을 ‘양비론’이라고 비난합니다. 내란이 발생해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내란 세력과 그들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세력을 모두 비난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방송되는, 국회의 담을 넘어 비장한 모습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과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윤석열을 방어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모습이 대조될 때 양비론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지키는 민주당과 법원에 난입해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파의 대립이 방송과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기후위기의 심각성, 일상의 삶의 위기, 정치적 대의의 위기는 모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위기의 원인 또는 배경이 되었던 체계는 헌법적 가치로 지켜야 할 ‘신성한’ 것으로 떠받듭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계엄-내란이라는 돌발적인 사건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민주당-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힘의 대립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결과-사건’입니다. 결과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라는 ‘괴물’이 원인일까요? 극우적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 국민의힘이 원인일까요? 주어진 사태의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질문이 잘못되면 부적합한 답을 얻게 됩니다. 양비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아주 협소합니다. 계엄-내란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2024년 민주화된, 시민사회와 공론장이 두꺼워진 한국에서 계엄-내란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탈-정치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좌-우의 정책적 대결이 약해졌을 때 사소한 차이를 과장하는 정치가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를 화해 불가능한 적대로 과장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내용보다는 포장이 중요해집니다. 정치인과 정당의 역량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광고와 여론전이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정치는 사실에 대한 진실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말의 정치적 효과(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만을 추구하는 격투장이 되어 버립니다. 민주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광고 영상과 구호가 우선합니다. 정치는 점점 내용을 상실하고 껍데기가 된 절차만 남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지식의 수준, 그리고 그것이 더 깊고 넓게 논의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갖추어졌지만, 의회에 갇혀 있는 정치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인민의 정치적 열망은 소위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상품이 된 것입니다.

3.

정치의 상품화는 일상과 사회 전체의 상품화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오로지 개인의 실력에만 기대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실력만으로 이미 기득권이 ‘신분’이 된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 패자라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후기 자본주의 소비사회,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일상까지 파고든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의 기준은 ‘나’를 나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는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통로는 없습니다. 신유주의적인 경쟁주의는 그렇게 패자라고 느끼는 것을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승자’의 감정이 있어야만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익명 뒤에 숨겨진 혐오의 정서가 생겨납니다. 불만에 근거한 혐오의 정치에 동원되는 것이지요.

사실 불만과 좌절의 정서는 부정형입니다. 때로는 좌파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제러미 코빈,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형이기에 극우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트럼프 현상,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까지 말입니다. 합리적인 정치적 표현이 막혀 있는 조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혐오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과잉 표현된 혐오의 정치는 또 다른 혐오를 낳습니다.

4.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계엄-내란과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사이 대립의 원인을 찾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시장 맹신주의가 불러온 사회적 양극화와 그에 따른 좌절입니다. 둘째, 이에 따라 정치가 상품화되어 사회적 불만과 좌절이 정치적으로 논의될 기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셋째, 현재의 정치적 대의 체계는 ‘대의’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일상의 불만과 협소한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 변화의 열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넷째, 이렇게 일상의 현실로부터 분리된, 상품화된 정치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높아진 보통사람들의 정치의식이 제도정치의 장벽을 넘어 정치화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헌정질서는 사람들의 삶과는 무관한, 하지만 그들의 겪고 있는 고통과 그 결과인 (무정형의) 불만을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동원하는 반-정치를 보호합니다. 이제 형식과 무늬만 남은 ‘헌정질서’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 대화와 타협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도 무력화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은 타락한 헌정질서의 증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쩌면 윤석열을 만든 것이 헌정질서 그 자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5.

채효정 선생님께서 쟁점화한 또 하나의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비판의 대상은 특히 ‘자유민주주

의'이지만 '민주주의'라는 기표 자체가 옛날과 같은 강한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느낌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신 제숍이 1970년 말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자신의 외피(shell)로 선택한 민주주의의 판본이 '자유민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극우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기에, 민주주의라는 '텅 빈 기표'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헤게모니 담론에 훨씬 더 큰 반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입니다. 자유주의의 기본은 다원성(plurality)입니다. 고정된 선(the good)을 말할 수 없고, 옳은(right) 절차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숍에 지적한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원리와 자본주의는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긴장과 하나의 모순을 지적해야 합니다. 긴장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다원성으로서의 자유는 개인이 갖는 자율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폭정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민주적 역량을 갖지 못한 민주주의는 타락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토론과 숙의로서의 민주주의가 결핍된 개인의 자율은 무질서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자유민주주의는 여기에 한참이나 미달하고, 그래서 때로는 독재와 파시즘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나타나지만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고정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동요시키는 역동적 정치여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긴장은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경제체계는 이런 역동성을 멈추게 합니다. 긴장을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자유는 민주주의 탓을 하고, 민주주의는 자유의 탓을 하죠. 그런 파괴적 긴장과 소란한 다툼 아래서 자본주의의 착취 매커니즘은 유지됩니다.

6.

그렇다면 내재적 비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외피로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시장 선택의 자유로 축소합니다. 자율성은 화폐구매력에 따른 소비의 자유이지요. 상품과 화폐의 그물 속에 갇힌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상품-물신성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다원성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화폐 관계로 환원되는 극단적인 경제 환원주의는 다원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할 자유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 고착되어 굳어집니다. 윤석열과 한국의 극우파들이 되뇌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더는 '사회주의'라고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이후에 올 어떤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사회

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 곧 자본주의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게모니적 실천입니다.

7.

이런 입장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신자유주의와 파시즘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시장과 동일시한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실패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자유주의는 이윤과 자본 축적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면서 삶의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신화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 기획은 파산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과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무의식에 내려앉았고 몸에 새겨졌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파시즘과 동일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낡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런 무의식과 규율된 신체를 넘어서는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무의식과 신체는 계속 아우성과 몸부림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우성과 몸부림은 자유를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소비주의적 자본주의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하지만 결코 ‘혁명’과 같은 단절을 원하지 않는 정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틈새가 ‘지금-여기’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비판, 혁명, 사회주의라는 거대서사로 무장한 이념의 관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로의 도약은 ‘지금-여기’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의 무엇만을 찾기에 좌파는 언제나 대안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 안에서 길을 찾으려다 결국 체제 안에 주저앉아 버린 진보정당의 궤적은 답답함을 보냅니다.

8.

자유와 민주주의는 형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내용인 것일까요?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만족입니다.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쾌락입니다. 분명 후기 자본주의가 권장하고 있는 소비도 행복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만족과 행복을 주나요? 자본주의적 축적은 만족을 모릅니다.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소비가 부추기는 욕망은 끝없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하는 분야가 광고인 것입니다. 소비주의적 만족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과 그것의 뒤편에 밀려나 있는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감추는 위약(placebo)입니다. 일시적인 진정제 또는 진통제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소비주의적 쾌락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중독입니다. 소비 중독, 자동차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등등.

여기서 주류경제학의 원리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윤과 축적의 원리, 성장만능주의 말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새로운 자각이 요청됩니다. 경제학이 인간 생존, 살림살이를 관심으로 한다면, 삶 양식의 기예로서의 경제학은 이윤과 축적이 아니라 돌봄(care)을 기본원리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자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돌봄의 대상은 동료 인간을 넘어서야 한다는 자연주의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앞의 것이 페미니즘으로부터의 자각이라면, 뒤의 것은 생태주의로부터의 자각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존재인 인간은 항상 누군가로부터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삶의 첫 번째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에 모두 타자의 돌봄에 의지합니다. 인간이 지적인 존재로 진화한 대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무의식의 불안도 집단 속에서의 돌봄 없이는 완화되고 관리될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존재인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취약성과 돌봄이 연대의 망 속에서 보호되고 관리되지 못할 때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경쟁의 상태에서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취약한 존재, 불안한 존재를 더 취약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는 돌봄과 연대를 어렵게 공간을 분절하고 시간을 잘게 쪼개어 압박합니다. 이기적 원자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몸에는 상처가 나고 무의식은 불안을 더 강한 중독, 또는 자기의 비참함을 잊게 하는 혐오의 감정에 이끌리게 합니다. 하지만 몸과 무의식은 여전히 돌봄을 갈망합니다. 연대를 갈망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 공간, 몸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정치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포스트모던한 사상가들이 부정하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9.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취약함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타자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자각을 촉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성 지구에서 인간은 자연 생태계의 부분일 뿐입니다. 근대 계몽주의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함으로써 근대 문명을 성취했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계몽된 이성만 생각했던 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모두 지성과 이성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체계였던 것이죠. 여기로부터 이성의 오만함이 폭로됩니다. 계몽은 인간 이성의 오만함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떠나왔던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은 자연주의적 각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이 인간에게 자연 속의 동물/사물과 같은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자연의 부분일 뿐입니다.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외적이지 않다는 자각은 누구의 ‘자각’인가요? 이런 자각이 요청된다는 사실이 지구생태계의 역사에서 갖는 인간의 독특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계몽주의가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anthropocentric humanism)이라면 인간이 예외적이지 않다는 새로운 자각은 자연주의적 휴머니즘(naturalist humanism)이라고요. 기후위기와 인류세 시대에 인류는 자연의 한계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집합적 역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환원론적 자연주의(non-reductionist naturalism)라고 부르겠습니다.

돌봄과 의존의 대상은 자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도로, 자동차, 스마트폰.....인간은 자연적 존재로 자연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도구와 인공물 바깥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은 잡종입니다. 잡종인 인간은 자신의 일부인 자연과 사물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미 잡종인 인간이 타자를 차별하고 미워할 수 없습니다. 비-환원론적인 자연주의와 잡종의 윤리학은 장구한 진화의 역사에서 성취한 인간의 역사적 역량입니다.

10.

이제 사회주의 정치는 일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마르크스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중 전략이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중 전략의 포기는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이겠지요. 알튀세르나 푸코가 언급한 장치, 물질적 장치의 변형을 추구하고, 그러한 변형이 동반하는 체험을 행위자들의 각성, 또는 학습으로 조직화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필요가 자각되는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 대해 저항하면서 연대하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와 교통의 정치는 몸의 체험에서 시작해서 시간과 공간을 정치적 주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대와 교통은 보통사람들의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만족’과 ‘돌봄’이 사회구성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돌봄과 만족은 우리 삶의 자연적 한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와 급진화이고, 그 내용은 ‘시장의 사회화’, ‘국가의 민주화’, ‘대중의 역량 강화’의 삼중의 전략입니다.

위의 글을 작성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저의 생각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약,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제시합니다.

[토론2]

저강도 내전사회라는 지성의 비관주의와 사회세력화라는 의지의 낙관주의

정정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질기원의 접합

결론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자면, 나는 현재 계엄-내란 국면에 대한 채효정의 분석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즉 현재의 국면은 -나는 신자유주의를 일종의 축적체제로 파악하는데-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필연적 위기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관점에 말이다. 채효정의 글에 대한 토론은 내가 이 위기구조를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나는 그 위기구조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링크 유실 및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로 이해한다.

사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렇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서양에서 근대의 성립이 (反)신분제 정치질서로서 민주주의와 반(反)통제 경제 질서로서 자본주의라는 두 이질적 사회질서의 구축과정의 교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과정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링크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접합되는 경향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중심부 국가들에서 일반적 경향이였다. 반면 주변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심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접합되는 대표적 양상이 사회국가라 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을 국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로 삼았으나 왕의 목을 치고 신분제를 폐지한 프랑스 공화국은 곧바로 부유한 인민과 빈곤한 인민으로 주권자 인민의 분할이라는 난제에 직면한다. 그러한 분할은 1848년 사회공화국을 기치로 내세운 노동자 계급의 봉기로 이어졌다.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인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혁명의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1848년의 봉기는 부르주아지의 무력에 의해서 진압되었으나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프랑스 공화국의 분열은 지속되었고 이는 1871년 파리로틴의 성립과 진압이라는 내전을 결과하게 된다.

동증로에 의하면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국가는 프랑스 공화국의 계급적 분열에 대한 응답이었다. 사회보험, 주거개선, 국민보건 등과 같은 사회정책을 통해 프랑스 인민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것’이 탄생했다.(동줄로, <사회 보장의 발명>, 2005)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가를 사회국가라고 학자들은 정의한다. 그런데 발리바르는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국가란 단지 사회적인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사회적인 것이 국민화 된 형태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파악한다. 그는 이렇게 국민인 한에서 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사회적 권리(혹은 경제적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받게 되는 국가형태를 ‘국민사회 국가(État national-social)’라고 개념화한다.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2010)

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할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사회국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사회국가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사회국가는 계급 분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의 원리, 즉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을 일정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형태였다. 국민사회국가를 통하여 국민에 포함된 이들은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경제적 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국민적 경계 내에서 일정하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민주권은 정치적으로는 보편선거로 제도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으로 제도화됨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으로 표현되었다. 계급 간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계급들은 인민주권의 현실성에 합의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격이라는 경계 내에서 작동하는 장치였고 그 자격 내에서는 또 다른 분할이 존재하지만, 정치적이건 사회경제적이건 인민주권이 개별화된 권리인 시민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시민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로지 국민일 때에만 보장될 수 있는 시민권, 즉 국민화 된 시민권이었다.

그런데 국민사회국가는 국가적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즉 자본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기능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장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발생한 자본축적의 위기 이래로 자본주의는 팽창보다는 축소를, 포섭보다는 배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국민사회국가의 위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을 가능하게 했던 장치의 가능조건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와 신자본주의 치안국가

국민사회국가의 위기는 “현재 자본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무능력을, 즉 [구조적] 착취를 [조직하지] 못하는 자본의 무능력… 말하자면 진정으로 세계화된 축적 과정의 재정적, 안보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최종분석에서, 정치적 비용의 문제에 대한 자본의 어떤 무능력”(발리바르, <대중들의 공포>, 2007)과 연결되어 있다. 자본의 이와 같은 무능력은 결국 더 이상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포섭할 수 없는 무능력이며, 국민이라는 틀 속에서 일정하게 보장했던 시민적 권리, 특히 사회경제적 권리를 더 이상 포괄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국민사회국가는, 계급투쟁 및 좀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권 및

사회적 시민권의 연관망 속에 포함되어 왔던 사람들 전체나 그 일부를 [사회적 연관망에 대한] 소속을 박탈함으로써 배제한다 (이는 내적인 배제 형식을 재창출하는데, 이번에는 제한된 영토를 차지하는 한 정치체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인, 따라서 외부가 없고, 탈출의 가능성도 없는 경쟁의 틀 속에서 그렇게 한다).(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2010)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변형된 ‘현재의’ 국민사회국가는 더 이상 탈주가 불가능한 전지구적 경쟁의 틀 내에서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람들과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제되는 자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배제된 인구가 산출된다는 것, 즉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경제적 권리들이 제한되거나 박탈되고 사회경제적 지위이동의 가능성이 지극히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를 살아가는 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배제된 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쌓여가며, 아직 체제에 불안정하게나마 포섭되어 있는 자들은 언제 배제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치안 국가(security state)’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념들과 연결된다. 일차적으로는 배제된 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체제를 위협하는 반란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제 내에 아직 포섭된 자들이 배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역시 권력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발리바르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치안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 즉 ‘안전(sécurité/치안-인용자) 중심적 면모’(발리바르, <정치에의 권리>, 2011)가 강화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파시즘에 접근해 가고 있다. 자신들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무기력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 그들이 항상 “좋은 쪽”에 있고, 희생자, 전형적인 불쌍한 사람들—나는 “열등 인간”이라는 말까지 쓰려고 했었다—은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라는 점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안전(sécurité/치안-인용자) 중심적 조치들을 취하고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것—이것이 어떤 형태 아래 어떤 이름(국민 우선은 그런 이름들 중 하나이다)을 달고 나타나든 간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같은 책, 146)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환, 즉 팽창하지 않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등장과 이로 인한 국민사회국가의 위기는 중심부 국가들의 치안국가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접합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탈접합의 구체적 양상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 식민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 국가형태가 파시즘에 근접한 치안국가의 등장인 것이다.

3. 저항도 내전 국면의 예감

나는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에서 논의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란 바로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식민화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관철

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자본의 식민화에 대한 민주주의의 대항작용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는 이러한 대항작용을 일거에 봉쇄하기 위한 에피소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에피소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피소드를 가능하게 한 환경이자, 그 환경의 장기지속적 효과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경우 사회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개발독재, 즉 한국의 발전주의국가 역시 국민사회국가의 주변부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중심부 국가의 국민사회국가처럼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통한 계급갈등의 조절이라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은 주민을 국민교육, 국민의료보험, 국민개병제 등과 같은 국민제도를 통해 동일화²⁰⁾하고 국민이라는 표상을 통해 주민들을 자본축적에 동원하였다. 또한 반민주적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위한 동원에서도 국민은 핵심적 기표였다. 이런 동력을 통해 한국은 주변부 국가에서 반주변부 국가로 ‘발전’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발전의 목표는 중심부 국가의 국민사회국가였다. 주변부 국가로서 한국은 국민‘사회’국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발전’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발전국가가 약속했던 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 즉 국민사회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전 지구화 국면에서 반주변부의 최상층 내지는 중심부의 최하층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도달한 것은 국민사회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이 중심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사회적 삶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국민됨이 곧 사회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일정 수준에서 담보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 국민 대다수가 사회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즉 부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세습되고 어린 시절부터 과잉 경쟁에 노출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 지위와 상징자본의 차이에 따라 비공식적 신분상의 구별 짓기라는 폭력에 노출되는 사회가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조건이었다.

경제적 부와 문화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계급적 차이를 사실상의 신분차이로 만들기 위한 구별 짓기를 폭력적으로 행사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는 이들은 사회적 인정의 차원에서 삶을 ‘살만한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경험하는 대중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통, 불안, 분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은 복잡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파악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되기 쉽다.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정념적 인식, 혹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으로서 그 고통의 원인을 유발하는 적을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불안을 잊게 해주며 적과의 싸움에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동일성, 상징 중심의 결집이 이루어진다.

이런 조건 하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 이전에, 극우 대중의 서부지법 침탈 이전에 이미 한국 사회

20)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이 동일화 과정은 한국에서도 역시 차별적이었다. 한국의 국민적 동일성 형성을 위한 제도와 표상은 진정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을 내부에서 분할하고 위계화하는 것이었다.

는 정서적 내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산업화 시대의 업적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낡은 채찍하는 민주화 세대와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인 민주당에 대한 노인들은 증오는 태극기부대로 결집하였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디폴트값이 되었고 정규직조차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경로를 살아가야 하는 일부 젊은 남성들은 김치녀로 표상되는 여성들을 적으로 삼아서 일베-멤코-신남성연대 등으로 결집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에 시달리는 일부 여성들은 생물학적 남성 및 트랜스젠더를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불이익의 원인 제공자로 파악하고 생물학적 성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결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된 적들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자신처럼 고통을 겪고 있으나 자신보다 약소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혐오의 정념이 강화된다. 소위 혐오표현으로 통칭되는 모욕, 조롱, 증오의 정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투척되는 정서적 테러리즘이 이미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서적 차원에서 시작된 내전적 상황은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치적 내란의 기도 이후 실제적 내전, 말 그대로 ‘시민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변모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1.19폭동은 정서적 수준에서 예비되어 오던 내전이 행동의 수준에서 실행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무장이 금지된 한국사회에서 내전이 1930년대 스페인 내전처럼 화기를 동원한 전투의 양상으로 치달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폭력이 동원된 헌정질서에 대한 거부, 시민 간의 충돌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이미 진행 중이던 정서적 내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산발적으로 물리적 행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사회가 ‘저강도 내전’의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저강도 내전의 주체들은 전도된 변혁운동의 형태를 띤 극우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기존의 사회변혁운동이 전개한 투쟁의 방식, 저항의 언어를 사용하여 신자유주의 치안국가, 혹은 파시즘에 접근하는 국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세에서 주체형성의 특징적 측면은 극우정치세력이 한국사회에서 명백하게 상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극우세력은 군사파쇼정권을 이어온 제도권 보수정당에 배태되어 있는 엘리트적 계기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노인들, 일베에서 멤코로 이어지는 청년 남성들이라는 대중운동의 계기로 실존해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세력이 이런 경향을 자신의 본령으로 내세우지는 않아왔다. 그런데 내란실패 이후 소수파가 될 보수제도정당은 이제 극우대중들의 언어와 행태를 비호하며,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조직하는 등 명시적으로 스스로를 극우정치의 제도적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엘리트가 한국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 연합의 파시즘적 성향과 극우대중을 매개하며 하나의 정치블록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극우정치세력이 한국 정치의 상수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에 의해 한국사회의 체제를 ‘전환’하려는 정서적, 언어적, 물리적 시도가 전개되는 국면이 향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성할 듯하다.

4. 사회세력화와 인민전선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저강도 내전 국면이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위기가 표현된 것이라면,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라면 해답은 혁명일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니라면, 더욱이 혁명에 필연적으로 혁명적 세력의 실제적 정치 역량 문제, 폭력의 과도화에 대한 제어 가능성의 문제, 혁명 이후 체제 대안의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부재하다면 혁명은 급진적인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혁명은 충실히 고민해야 하나, 혁명은 기획하여 원하는 때에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언제나 ‘구체적 정세에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어느 혁명가의 조언대로, 우리는 현 정세의 구체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실천의 지침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 정세에 대한 나의 입장은 상수가 되어가는 극우세력에 대항하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징은 헤게모니 없는 통치라 할 수 있다. 이는 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집권한 모든 정치세력이 보여주는 일관된 특징이기도 하였다.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극우정치블록 역시 현 지배연합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다른 정치적, 사회적 세력 역시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정치적, 사회적 세력도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채 충돌하는 교착 상황이 현재의 국면을 특징 짓는다. 이러한 국면에서 반자본주의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좌파들이 취해야하는 실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반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적 모색을 전제하고, 저강도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반파시즘-반신자유주의 블록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탄핵집회의 대중적 역량과 남태령에서의 예기치 않는 연대의 힘을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핵심이다. 과거 반파시즘 투쟁의 국면에서라면 ‘인민전선’이라 명명되었을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나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反)국민의힘 결집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非)민주당 세력의 결집이라는 방향 역시 중요하다. 비민주당 세력이 결집될 때에, 반국힘으로 표현될 반파시즘-반신자유주의 투쟁이 민주당 집권으로 또다시 결론 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민주당 집권기에서도 반자본주의 이행의 계기를 기입하고 반자본주의 체제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반파시즘-반신자유주의 인민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정치세력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비조직 대중운동이나 조직 사회운동 단위들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남태령 시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조직된 사회운동과 민주적 대중운동의 연대가 우리의 희망이라면 이를 구체적 세력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엮어 내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러한 엮음을 나는 사회세력화라고 생각한다. 정치세력화는 사회세력화의 상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세력화를 통한 반파시즘-반신자유주의 인민전선이 구축될 때, 민주당에 대한 압박과 제

어 역시 일정하게 가능해 질 것이다.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 압력을 통해서. 현 정세에서 체제전환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반파시즘-반신자유주의 블록의 형성, 사회세력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토론 3]

혐오를 양분 삼아 성장해 온 극우의 20년, 대안이 사라진 현실에 자리한 극우의 효능감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보수 개신교 집단이 극우의 총체가 되기까지

백중현은 책 <대통령과 종교:종교는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²¹⁾에서 보수 우익 정치가 보수 개신교계를 본격적인 아스팔트 정치로 끌어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장면을 소개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조갑제가 '조갑제닷컴'에 '전 인구의 약 30 퍼센트나 되는 잘 조직된 거대한 반공보루'로서 개신교를 언급하고, 이후 2년간 <월간조선>을 통해 조용기, 김장환, 옥한흠, 김진홍, 길자연 등 대형교회 목사들을 인터뷰하는 등 보수 개신교와의 연대활동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 교회가 반김대중, 반공산주의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1년 7월 한 달 동안 '기독교의 궤기:카인의 후예, 사탄의 제자 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김일성-김정일', '기독교 뿌리에서 나온 이승만과 김일성의 차이' 등을 게재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수 개신교계의 역할을 선동했다. 보수 개신교계는 이에 부응해 수차례의 친미, 반공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 국면을 맞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위시로 한 보수 개신교계는 본격적으로 광장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에 이른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해방 이후 수백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법인을 쥐고 있었던 보수 개신교의 기반을 흔드는, 최대의 적으로 여겨졌다. 목사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삭발 투쟁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며 의원 낙선운동까지 벌였다. 그리고 바로 이 때,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나섰던 박근혜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와 정치적 경험은 이후 보수 개신교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한 축으로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등 뉴라이트, 보수 정권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들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설립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좌파적 음모'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이나 인권 보장과 관련된 법·제도를 종북, 빨갱이, 좌파와 연결하며 계속해서 적대를 설정해왔다.

21)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종교는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인물과 사상사, 2014. 199-202쪽.

이후 보수 개신교 집단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하고,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되면서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등과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홀리라이프, 예수재단,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같은 단체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빌헬름 라이히를 끌고 들어와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게 하고, 정상적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성을 문란하게 하는’ 성정치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여성가족부,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대한민국 곳곳에 파고 들었다며 이를 막아내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설파하기 시작했다.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도 점차 심해졌는데 이 시점에서 이들은 신남성연대나 TERF 그룹과 조우한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부터 박근혜 탄핵 국면인 2017년까지는 이들의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격화되었다. 민주노총, 전교조,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졌고 엄마부대 주옥순 등은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만들겠다고 나서거나 박근혜 탄핵 시기 계엄을 선포하라고 선동하는 등 태극기 집회 일원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했다.

한편, 이들은 광장에만 있지 않았다. 이들은 각 지자체와 성교육 현장에 파고들었다. ‘성경적 성교육’을 내세워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여 파견하는 한편, 각 지역의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17대 총선부터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의 김지연 약사,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의 한효관, 대한민국엄마부대의 주옥순 등 주요 인물들은 20대 총선부터 기독교자유당, 자유통일당, 기독교자유통일당 등의 기독교 정당 등에 비례후보로 참여했다. 특히 주옥순은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넣었다가 전광훈이 주도하는 기독교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전광훈은 조용기 목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인물로, 앞서 서술한 흐름에서 입지를 다지고 문재인 정부 이후 친박의 세가 줄어든 태극기 집회를 장악했다. 그는 여타의 보수 개신교 그룹과 함께 이스라엘-미국에 이어 이승만이 기도로 제헌의회를 시작한 대한민국이 최후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에 근거하여 친미, 반공,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반 이슬람, 반이민 등의 내용을 설파했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내 친중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음모론 등으로 반공 프레임에 중국을 끼워넣었다. 2000년부터 보수 개신교를 아스팔트로 끌어냈던 조갑제는 전광훈에게 강한 신뢰를 보이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도 여러차례 참석해서 발언했고, 그가 선정위원회 대표로 있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의 대상을 전광훈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김장생은 <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이라는 논문²²⁾에서 개신교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22) 김장생. (2020). 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 문화와 사회, 28(3), 139-188쪽

바탕으로 소득이 낮고 정치적으로 우파일수록 전광훈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정치적으로 우파일수록 그에게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근본주의 신학으로 결집된 과거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는 2017년 이후 전광훈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로 변하게 되었다고 보고, 핵심 지지층 외각의 일반 지지자들은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통해 강화된 근본주의 신학이 아닌 보수적 정치성을 중심으로 전광훈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광훈의 일반 지지자들은 교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전의 보수 개신교 집회에 모인 이들과 비교할 때 2017년 전광훈 주도의 집회에 모인 이들은 종교적 명분에서만 아니라 보수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더욱 극단적인 성향으로 결집되어 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는 전광훈의 파장 안에 있는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엄마부대가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신 남성연대, 신의한수, 일베저장소 등의 온라인 기반 그룹이 함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점차 보수에서 극우로 강화되는 양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결집했던 보수 개신교 집단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부딪힌 개신교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을 매개로 집결했고, 반공을 위시로 한 보수 이념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모였다. 2010년대에 다양한 이름을 걸고 나타나기 시작한 보수 개신교 그룹은 기독교 시민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해서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 영역과 민관 거버넌스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이 보다 심각한 극우화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즈음인데 이때부터 쿼어문화축제를 가로막은 반동성애 집단과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집단, 반페미니즘과 여성혐오, 이주민 혐오를 선동하는 남성 집단과 보수 유튜버 등이 점차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박 세력과 전광훈 세력이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 수호를 곧 정권 수호와 친미-반중 구도로 내세워 세를 결집시키기 시작하면서 그간 존재했던 모든 혐오 선동이 각종 음모론과 함께 뒤섞여 극우 세력의 영향력 하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극우를 성장시킨 삶의 하락과 정치의 무능

그렇다면 과연 극우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동안 정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보수 개신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수 정치에 물질, 인적 지원을 해 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이들의 관계는 더욱 노골화 되었고,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로는 아예 현 국민의힘,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극우 세력의 힘에 영합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방해로 핑계로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않다가 번번이 타협하거나 결국 무산시켰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부터 진보정당의 설 자리를 잠식하고 양당구도가 심화되자 양당의 정책 역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이 의미 없어진 자리, 더 이상 새로운 대안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시간 속에서 극우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심각한 주거와 일자리 불안정,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 투자와 부채에 의존하게 된 이들, 노년층과 청년층에서의 빈곤의 심화, 자살율의

증가, 사회 안전망의 붕괴, 전세 사기, COVID-19 팬데믹, 기후 위기의 현실을 겪으며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게 된 사회에서 다수의 남성 청년 집단이 중독적인 효능감에 매달려 혐오공격과 음모론에 기반한 극우의 집단행동에 합류했다. 같은 시기 2030 여성들 중 상당수도 극우 세력에 합류했으나 상대적으로 그 수가 남성 집단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안티와 혐오 선동을 통해 효능감을 느낀 이들과 달리 2030 여성들은 구체적인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집단행동을 통해 이루어낼 변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 또한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들 사이에서도 트랜스젠더 혐오, 난민 혐오 등이 분출되어 나왔고 일부는 극우 세력에 합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극우 주류에 합류하기에는 성향이 맞지 않았고 대신 다른 페미니스트 그룹, 성소수자 그룹과 싸우며 영향력을 가져가려 해왔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란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선수 치는’ 신자유주의 통치 양식은 어떻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까. 윤석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실질임금의 하락과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웠고, 급기야 비상계엄을 발동하며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발언했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고, 이주민 단속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 법치를 내세워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 세력을 특정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방식은 전형적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윤석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붙잡기 위해 극우 세력과 함께 아예 민주당을 제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비상계엄 포고령에서는 의사 집단에 대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소위 기득권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한편으로 자신을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위치로 두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극우 세력에게 민주당은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친북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친중 세력이며, 이재명과 조국 등으로 상징되는 범죄 세력,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여 동성애, 무슬림이 날뛰게 하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민주당이라는 타겟에 극우의 선동 레토릭과 혐오의 대상을 모두 몰아넣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는 신자유주의 통치 양식이기 이전에 독재 파시즘의 방식이고 이를 통해 반대세력을 완전히 소거해 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이들이 소멸시키고 싶었던 대상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던 이에 대한 감정이입이며, 윤석열이 제거됨으로서 다시 그 의지가 위기에 처할 것에 대한 불안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제거되었을 때 자신들의 제거하고자 했던 불안의 요소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 불안을 대응할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극우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의도한 정치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정권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윤석열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에게서 두드러지는 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을 선거 시기에 선언처럼 등장시켰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우파 지지세력을 효과적으로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무소속 후보일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고 신지에 영입에 반대하는 청년들을 만난 이후 “페미니즘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써왔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는 그의 지지율에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점은, 여성가족부가 무용하다는 주장이 여성을 경제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삼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의 설립은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목적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이후 여성부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가족, 보육, 청소년 영역이 덧붙여졌다 떼어졌다 하며 부처의 역할과 위상에 자주 부침을 겪어 왔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등장한 이후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욱 크게 흔들렸다. 저출산 정책은 임금노동에서 여성 노동을 불안정한 노동 시장의 예비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돌봄을 전가하려 하는 시도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의 생산, 재생산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조정을 포기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과 비용을 축소하여 재생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혐오 백래시에 편승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인구정책을 더욱 전면화하여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국내 이주민 유학생과 결혼이주 여성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사노동자로 활용하겠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를 지지기반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를 계속했다면 심화되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 불안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양태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가족계획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영역에 있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 지속시키면서 재생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극우를 성장시킨 배경에 심각한 삶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새롭게 구축할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정책을 수단으로 삼는 그간의 틀을 폐기하고 성평등과 인권, 생태가 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운영원리가 되게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을, 이주민을, 새로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을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노동자를 끝까지 소진시키고, 금융 자본에 의해 주거와 삶의 영역 전반이 저당 잡히게 만들고, 혐오만이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게 하는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토론 4]

민중의 민주주의로 평등·평화·생태 세상으로

공성식 | 플랫폼C, 공공운수현장활동가조직(추)

1. 어떠한 위기인가?

- 현 상황을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망상 또는 시대착오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 제도 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 체제 전반의 위기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 이러한 분석에 근거할 때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의 파면·처벌과 함께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인식할 수 있음.
- 발제문은 12.3 계엄 선포와 이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민중의 민주주의’의 위기로 파악하고 이를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가 불러온 정치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음.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예외적인 일탈이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 속 체제에 대한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사태의 정치, 새로운 파시즘의 도래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임.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토론을 제기 하고자 함.

○ 자유민주주의는 근원적 불가능성에 부딪혔나?

- 발제문은 “뉴딜 체제(미국), 45년 체제(유럽), 또는 87년 체제(한국)라고 불렀던 자유민주주의적 합의에 의해 수립했던 질서와 원칙의 전면적 총체적 붕괴” 상태로 진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나 완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같으나 신자유주의 이후의 전망을 질서의 붕괴, 무질서 상태로 단정짓는 것은 선부르며 이후 분기에 대한 다양한 흐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봄. 현재 대의정치의 위기를 ‘대의의 근원적 불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과도해 보임.
- 현재 상황을 포스트-신자유주의로 보는 학자도 있고 신자유주의의 지속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폭발하였고 자본주의 체제의 분기점이 도달했다는 것임. 신자유주의의 폐해 속 안티테제로서 포퓰리즘이 등장하기도하고, 보호-안전-통제에 대한 열망이 국가의 시장과 자본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라는 요구로 나타나기도 함. 한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이나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의 경제 당국의 대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듯 훨씬 교조적인 신자유주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시장 규제완화와 기업 자유를 옹호하는 산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는 함. 제한된 수준이지만 서구 선진국에서의 전후 타협 체제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실현할 수 있었던 핵

심 전제는 국가를 통한 자본의 통제,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의 연합에 기반한 상층계급의 포위.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용적 신자유주의’ 또는 새로운 ‘한국형 뉴딜연합’은 신자유주의와의 확실한 결별이나 자본에 대한 통제나 계급연합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허구적.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

-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필요. 발제문의 지적처럼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신자유주의와 싸우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탈환은 불가능”.

○ 비상사태의 정치, 국가기구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

- 발제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인민의 반란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동원되는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의 총화로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팬데믹 시기 각국 정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방역 조치 등과 함께 ‘비상사태의 정치’로 규정.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 정치의 사법화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국가기구의 반민주적-반민주적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짐.
-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병력을 투입해 ‘불법 이민’을 통제하겠다고 선언. 윤석열 정부에서도 건폭몰이 이외에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화물연대파업 당시 사회적 재난 규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쟁의행위의 사회적 재난 규정 등,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 재정 정보 등의 외부 공개 강제 등 어떤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권을 극한까지 동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여왔음. 노동조합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계엄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 세계적으로도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징벌적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러한 변화가 설명되고 있음.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허구적이라고는 해도 외양상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거나 시민사회의 일부를 포섭하여 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온건한 관리 방식의 한계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뒤에서 이야기하는 파시즘과 달리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는 외양상으로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보임.
- 행정부의 일방 통제, 정치의 사법화, 대의정치의 위기 속에서 국가기구의 민주화, 인민의 통제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탈환에 있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함.

○ 파시즘인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입법부의 파괴와 주요 정치 지도자와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체포까지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극우 대중운동의 성장과 국민의 힘의 극우화,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의 상승하며 파시즘의 도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음. 발제문은 경제와 결부된 파시즘의 ‘전제 조건’과 지지 기반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후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이때 파시즘은 20세기 파시즘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
- 분명 윤석열 내란 집단과 극우 대중운동은 내부의 적의 악마화, 반대파 제압을 위한 군대 혹은

경찰력 동원, 비합법적 통치 수단의 강구 등 20세기의 파시즘과 공유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불안정한 일자리,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 삶의 불안과 탈락에의 공포, 기성 정치권의 무능은 이러한 흐름이 발호할 수 있는 대중적 토양이 되고 있음.

- 하지만 20세기 파시즘과 현재 한국에서 파시즘으로 지목되는 흐름과는 차이 또한 존재. 과거 파시즘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시민사회를 흡수한 '총체적 국가', 유기적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복종 등의 특징을 보였음. 하지만 윤석열과 극우 대중운동에서 확인되는 극단적 시장주의자에 가깝고, 사적 자유에 대한 옹호와 경쟁의 극단화를 추구.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극우대중운동을 파시즘이라는 틀로 규정하는 것은, 20세기 파시즘을 모델로 하는 부정확한 일반화로 빠지거나 현재 상황의 특징을 가려버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음. 더 우려되는 점은 파시즘의 위협에 대항하여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사회세력이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인민전선론 또는 민주대연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는 현재 민중의 민주주의를 탈환하기 위한 핵심 전선이 되어야 할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를 교란하거나, 외양상 법치의 틀을 쓰고 있는 국가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킬 수 있음.

2. 광장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모든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필요

- 윤석열 구속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윤석열 퇴진과 단죄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음. 하지만 극우 대중운동의 성장과 보수세력의 재결집과 극우대중운동의 준동 속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12.3 내란과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 광장 투쟁이 더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함.
- 극우 대중운동의 준동으로 인해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당분간 내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극우 대중운동을 악마화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또한 저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대항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안전과 사회 보호를 이유로 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내전을 통해 혁명을 진압하려고하는 지배세력의 전략에는 '내전에 대항하는 혁명'을 통해 대항해야.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감을 느끼는 평범한 시민들이 극우의 논리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나가야
- 12.3 계엄 직후 광장을 지켜온 것은 자발적 시민 참여의 힘이 컸음.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 대중조직, 정당, 사회단체 등이 초기부터 투쟁에 함께하였지만 회원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조직하지는 못 하였음.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의 임단투 파업 결함 등을 제외하면 실제 파업이 조직되지는 않았음. 주말집회도 소수 간부들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탄핵은 상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다소 안일한 인식도 있었고 현장까지 이르는 교육, 선전 등 실질적인 조직화 작업이 취약했음. 현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식이 보수화된 측면도 있음.

조직된 노동자들이 단지 집회에서 행진 길을 뚫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길을 열어내는 역할을 해야 할 시기. 조금씩 현장의 요구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연결하며 흐름을 만드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운동 내에서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총파업의 형식적 선언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조직화가 중요.

- 투쟁이 완강하게 지속되려면 광장 투쟁의 의제가 삶의 문제로 더욱 다양해지고 공통의 사회 변화의 요구로 모아질 필요. 저지와 전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방향. 이 과정에서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연대가 튼튼해지고 광장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될 것.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며 사회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야. 집담회, 토론회 등 더 많은 공론장을 열어야.

○ 평등, 평화, 생태, 민주주의 요구의 전면화

-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촛불투쟁을 함께 했던 단체들이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각 단체들이 해 온 요구를 나열하고 집중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세력관계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수준에 미달하였음. 또한 마련된 요구를 정치권과 새 정부에 전달하는데 그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은 부재했음.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분을 실행하겠노라 약속했지만 실제 약속은 지켜지지 않거나 중도반단되었음.
-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함께하는 사회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역시 사회대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퇴진 이후 사회 변화의 요구를 수립하고 있음. 2016~1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요구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광장 투쟁에 참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과 연결되는 요구에서 출발하여 체제 전환의 큰 방향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 평등, 평화, 생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의 민주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전면화 할 필요.
- 윤석열 퇴진과 아직은 추상적인 사회대개혁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비상행동>은 탄핵 결정 이후 원심력이 확대될 가능성 있음. <윤석열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등 체제전환운동을 고민하는 세력들은 사회대개혁의 방향에 대해 내부 토론을 진행하며 <비상행동>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현재 국면에서 자본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음. 박근혜 탄핵 사유와 삼성의 후계 승계나 자본의 청부 입법 등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던 것과 달리, 비상계엄 자체에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 기업의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영리화-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조명하며 연결 고리를 찾아 나갈 필요.
- 사회대전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헌을 주장하자는 의견이 있음.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열리게 될 개헌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정초하자는 주장, 개헌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정치제도나 권력구조와 같은 제한적 의제가 아닌 전면적 개헌을 요구. 하지만 전면적 개헌을 관철시키려면 압도적인 대중운동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역으로 그러한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개헌론은 실현 가능성

이 낮고 지배세력이 주도하는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개헌론에 휘말릴 위험도 있음.

○ 민중의 주체화/세력화

- 광장 투쟁의 과정에서 서로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상호 이해와 연대의 경험을 통해 집합적 주체로 거듭나고 있음. 새로운 얼굴의 민중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장의 경험을 일상으로 옮기는 조직의 거점, 운동들의 연결과 네트워킹이 필요. (앞에서 살펴 본 공동의 요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중요)
- 노동조합 등 기존 조직들은 이번 투쟁을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운동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나아가 광장에 나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 윤석열 퇴진 광장 투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노동조합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 풀뿌리 조직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ex. 청년 세입자 모임, 지역을 떠나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 등등)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를 비롯하여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다양한 집단, 운동들의 연결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함.

[토론1 참고자료]

서영표 | 제주대 사회학과

1. 2010년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

민주화 과정은 이데올로기(담론), 제도, 경제적 구조의 복합적 작용에 대한 반응, 또는 개입으로서의 헤게모니기획들 간의 경합에 다름 아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의 확장을 기초로 한 헤게모니 기획이 존재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속성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사회적 토대를 확립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동일시한 것에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적 토대를 확립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 내지는 통합의 근거를 기저에서부터 파괴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립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내세운 ‘민주주의’와 ‘충돌’하고 시장중심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철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에 스스로를 가두는 그들의 ‘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막아낼 ‘또 다른’ 민주주의의 길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정권이 이데올로기적 수준, 제도적 수준, 경제적 수준의 갈등을 통합하고 새로운 역사적 블록을 구성할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 번의 자유주의 정권이었다. 두 번의 자유주의 정권은 스스로의 정치기반, 즉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정책노선을 추구했다. 정권을 창출해준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친재벌적인 시장중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지기반이 급격히 이탈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인 기득권층은 굳건한 한나라당 지지로부터 이탈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화의 성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로 제한하고 시장적 경쟁 강화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오도함으로써 보수가 원하는 것을 ‘진보’의 이름으로 완성했던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일상까지 파고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수파는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했다. 자유주의 정권과 그것의 정치기반 사이의 어긋남을 파고들었다. 신자유주의적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낙인찍고, 보수파가 공유하고 있던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양극화를 좌파정권의 무능으로 몰아붙였다. 보수층을 겨냥한 대북한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강화하는 유효한 무기였다. 자유주의 정부는 결코 ‘진보적이지 않은’ 시장자유주의를 진보로 내세웠고, 보수적 야당은 그것을 좌파로 낙인찍었다. 자유주의자들의 진보는 말뿐이었고, 보수파들의 진보는 실체가 없었다. 이러한 허구적 이데올로기 투쟁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화시켰다. 자유주의자들의 ‘내용 없는’ 수사로서의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자유에 근거한 경쟁력 제고와

등치함으로써 시장의 실패가 필연적으로 초래할 극단적인 사회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진보적’ 비판 담론, 즉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될 공간을 급격하게 축소시켰다. 보수파의 ‘실체 없는’ 대상으로서의 ‘좌파’에 대한 공격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시장논리의 전면화와는 별개인 무능한 진보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진보를 시장논리에서 찾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정부의 무능과 동일시했다. (“이명박 정부 2년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자유주의세력의 무능과 진보좌파의 과제”, 『진보평론』 44호, 2010)

2. 2014년에 바라본 한국의 정치지형

한국의 기득권 집단은 대중의 정서, 정념, 체험과 유리된 세계 속에 산다. 대중의 삶과 정치와 엘리트 집단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말뿐인’ 정치적 구호와 약속들로 채워진다. 소위 정치가적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포스트모던한 상품소비사회는 자본의 논리가 형식적으로나마 보장되었던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시장원리의 맹목적 추구가 불러온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하지만, 그 불만은 스스로에 대한 좌절(모든 것은 내 탓이다!)을 불러올 뿐이다. 경쟁력 없는 ‘내’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철저히 고립된 개인들이 느끼는 절망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모이지 않고 특정한 ‘타자’(외국인, 또는 사회의 적)에 대한 증오로 표출된다. 완벽한 시장의 신화에 근거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맹위를 떨치지만, 그 이면에 전체주의적인 배제의 정치가 공존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정치는 마케팅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극한적 대립이다. 모두가 ‘정치’라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물건 팔기’에 전념하지만 ‘내’가 아닌 ‘저들’의 상행위는 항상 ‘사기’라고 공격해야 한다. 마케팅으로서의 정치에서 물건의 질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상대방의 것은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중융합주의의 실체인 것이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모든 정치세력이 대중융합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대중융합주의는 상품소비사회가 불러온 욕망의 기호로 신자유주의 30년이 초래한 불만과 저항을 덮어 버린다. 그렇게 부추겨진 욕망은 마케팅 정치에 동원될 뿐 해소될 수도, 또 다른 정치적 에너지로 발전할 수도 없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것은 곧바로 체제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좌빨’로 낙인찍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욕망의 기호는 어쩔 수 없이 대중이 겪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충족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는 그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을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에 머물게 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동원을 위해서는 지금의 사회구조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역설적이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중의 불만을 건드려야만 하는 역설!

이러한 역설은 잘 만들어진 파트너십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보수’의 역할과 ‘진보’의 역할을 나

누어 가진 정치세력들 사이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이다. 파트너십의 전제는 기득권의 공유이다. 두 번째 전제는 이러한 ‘공유’의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세력에 대한 배제전략이다. 이것은 제도가 정해 놓은 게임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협약’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은 ‘합이 잘 맞는’ 겨루기 없이는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모두가 정치를 마케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달콤한 말들을 흘린다. 그리고는 서로 견제한다. 서로를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한다. 그 겨루기의 정도가 때로는 과장되어 그들 사이의 골이 정말 보수-진보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에 대한 언급조차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어 버리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치 엘리트 집단 사이의 정치는 ‘말 겨루기’일 뿐이다. 이 말 겨루기로부터 대중은 철저히 소외된다. 하지만 그들의 말 겨루기는 언제나 대중을 소환하고 호명한다. 그렇게 소환되고 호명된 대중은 사회집단도 사회계급도 아니다. 원자화된 개인의 합일뿐이다. 이제 계급으로 분할되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사라지고 뭉뚱그려진 통치와 동원의 대상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규모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항,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의 토목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달콤한 약속이 전달된다. 한 발 더 나가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그 다음 수순은 서로를 대중융합주의로 공격하면서 복지에 대한 약속은 무로 돌리고 대형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득은 나눠 가지는 것이다. ‘주변화된’ 좌파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면서 이러한 게임의 들러리를 자처한다.

한국에는 스스로를 좌파라고 믿는 민족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민족적 자긍심과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보수주의의 핵심요소라면 소위 자주파만큼 보수주의에 투철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좌파의 겉모습 속에 보수주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역시 스스로를 보수라고 착각하는, 아니 보수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보수주의가 가지는 원칙과 신념 같은 것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는 민족의 가치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회주의가 보수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통한 기득권 방어가 보수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시공간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파는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조건과 경제위기로부터 생겨난 대중의 불안과 공포라는 토대 위에, 한편으로는 시장과 경쟁의 원리로 국민을 개인으로 원자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원자들’과 국가 또는 국민의 간극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능동적인 주체들로 채워져야 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착각하는 (시장)자유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수의 얼굴을 한 기회주의자들과 맞설 때는 진보를 자처한다. 하지만 그들은 진보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시장과 자본을 옹호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라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킬 의지도 없다. 이들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면서도 민중(그들의 표현으로는 서민)을 위한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가진다. 이 환상은 민중을 원자화하면서도 국가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수 있는 우파의 사회통합 전략이 헤게모니적 블록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파와 중도파는 ‘신자유주의적 지배블록’을 유지하는 두 개의 축인 것이다. 그리고 ‘이념적’ 좌파는 제도와 운동 사이에서 진동한다. 이념적으로는 체제를 부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제도 안으로 투항하거나 이념과 구호뿐인 사회주의를 외친다. 그리고 종종 민중이 경험하는 불만과 저항에 근거한 ‘역사적 블록’을 구성하는 대항-헤게모니구성 과제를 ‘선거연합’과 혼동한다.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대중융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민족문화연구』 63호, 2014)

3. 2016-17년의 촛불

---1990년대 말 시작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을 시장의 원리로 고착화했다. 어린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시장이 강요하는 경쟁의 원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면화했다. 몸은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 규율되었고 우리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이다. 사회이동성은 닫히고 신분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권력행사의 정당성과 도덕성은 사라졌고 오직 이기적 본성만이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칭찬받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 깊은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불만과 절망은 부채사회를 조장하는 소비라는 위약(僞藥)이 주는 일시적인 진통효과에 의해 은폐되었다. 그리고 소비-부채의 악순환은 고립된 개인들을 더욱더 개인의 책임성이라는 족쇄에 단단히 묶어놓았다. 자신들의 모습이 영화와 드라마에 그려질 때 그것에 격하게 공감하지만 그렇게 영화와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에 만족하는 수동적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영화와 드라마 속 모습이 현실의 우리 모습이라면 지금 당장 폭동이라도 발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으로 고립되어 경쟁의 논리를 마음과 몸에 새긴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만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분열증적인 주체들이다. 불만과 좌절이 사회구조가 가진 모순의 직시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들 마음속의 분열증 말이다. 광장과 촛불은 이러한 분열증적인 주체들이 질서 안에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불만과 좌절감이 표출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체험하는 불만과 좌절이 ‘우리’라는 연대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시적 사회문제로 비약되어 해소되는 통로인 것이다.

라클라우의 용어를 빌리자면 한편에서 탈구의 개인적 계기‘들’은 연대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한편에서 구조적 모순은 적대로 발전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집합적 감정표출의 통로가 된다. 개인적 탈구들이 연대로 나갈 수 있는 작고 다양한 정치적 실천의 장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협동조합과 마을운동마저도 제도 정치의 부분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발적으로 드러난, 정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체계 수준의 모순의 일시적 드러남이 적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끌 좌파의 정치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고 시민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2016~2017년 정의당과 시민운동은 조·중·동이 쳐 놓은 프레임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저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가? 기존의 모든 것이 의심받는 시기, 기존질서의 모순을 드러내기보다 제도적 질서의 끄트머리에서 얻고 있는 한줌의 기득권을 마치 권력을 향한 교두보라도 확보한 듯 착각하고 ‘헬조선’을 만든 공모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좌파 정치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불안과 좌절이라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표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분노와 좌절의 에너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전되게 하는 좌파의 무능이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우발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눌러 있던 분노와 좌절의 에너지가 개인적 자기 파괴와 타자에 대한 파시즘적 공격이 아닌 국가를 향한 목소리로 모아질 수 있는 체계의 균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파편화된 좌절과 분노의 경험이 ‘등가인 연쇄’를 만들어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은 끊임없이 출현한다. ‘나’의 파괴와 ‘타자’의 부정이 아닌, 그리고 절규를 통한 일회적인 해소 또는 배설이 아닌 현실의 물적 운동을 통해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정치가 출현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들은 계속해서 유실되고 있다.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체계 자체의 균열만으로는 부정적인 힘으로써의 좌절과 분노의 에너지가 창조적인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분노와 좌절의 에너지가 체계의 균열과 만날 때,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현실의 착취 사이의 간극이 체험될 때 그 에너지가 제도 안으로 넘쳐 들어갈 여려 갈래의 길이 있어야 한다. 비록 그 길들이 잘 닦인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솟구치는 에너지가 방향 없이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람시라면 이것을 ‘진지’라고 불렀을 것이다.

좌파는 이러한 길을 닦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우리’의 길을 내기보다 제도 안의 대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올라타려는 시도를 반복했다. 제도 바깥의 에너지가 제도의 외벽 사이에 뚫린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그것을 자기 자동차의 연료로 공급받을 궁리만 했다. 제도의 철옹성은 그 정도의 작은 균열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준비된 수많은 작은 침투로가 없이는 예기치 못한 균열이 손쉽게 수리된다. 그리고 잘 닦인 대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좌파를 일상의 분노와 좌절로부터 격리시킨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체계의 위기가 드러나고 일시적이거나 분노와 좌절의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좌파가 위기 이전에 체계의 성벽을 이곳저곳으로 관통하는 작은 길들을 닦아놓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정치적 창조로 모이지 못한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초래되는 결정적 위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협화음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신호들이 감지되는 곳에서 작은 침투로만 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을 겪어왔던 것이다. 부안, 용산, 강정, 제주, 핵발전소 등등. 좌파정당과 시민운동은 그곳으로부터 작은 길을 내려 하기보다 현장에서 얻은 자

원을 제도 안의 대로에 진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소진해버리고 말았다. 좌파의 정치적 리더십은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체계 수준의 균열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계 수준의 모순이 예기치 않게 드러나는 순간을 대비하는 것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별적 수준의 탈구, 대개 이기적인 욕구로 나타나는 탈구가 ‘우리’와 ‘저들’을 확인하고 적대를 통해 연대로 나갈 수 있는 작고 작은 구멍들, 작은 길들, 그리고 작은 광장들을 만드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탈구들이 연대로 나가면서 구조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체계의 흔들림이 그런 연대의 힘과 만나서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어 놓은 2016~2017년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난 10년 동안 후퇴했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같은 10년 동안 똑똑히 목격했다.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광장의 촛불은 중단 없는 민주화의 주체를 만드는 기회가 되고 있지 못하다. 언론과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모해 쳐 놓은 ‘정상’과 ‘비정상’의 프레임이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이다.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치, 좌파 정치의 토대를 놓을 기회는 이미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탈구와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체계수준의 균열을 적대를 통한 연대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존재는 미미하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망을 담아낼 그릇을 발견하지 못하고 ‘탄핵 인용’과 ‘정권교체’로 빨려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열망과 저항의 사이클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다시 도래할 위기의 순간, 균열의 순간은 오늘에도 반복하고 있듯이 사이클이 좌절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학습장애를 극복해야 할 때다. 참담함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이 아니다. 87년 이후 수없이 반복되었던 열망과 좌절의 사이클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우리들 자신, 특히 좌파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의 학습장애와 무능력이 참담한 것이다. 정말 학습장애일까? 기존질서의 논리를 너무 빨리 습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현실이 여전히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또 다른 촛불은 조만간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향한 열망, 하지만 여전히 규율되고 있는 의식-2016년 촛불시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4(1), 2017)

4. 2018년 생각한 사회주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21세기 사회주의는 일상에 주묵하면서도 모순과 적대를 회피하는 ‘생

활정치'라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않고, 일상에서 생겨나는 실천적 지식을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과 결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상의 정치는 몸, 시간과 공간을 정치의 주제로 삼는 것이다. 거대담론을 포기하지 않지만, 거대담론의 내용이 되는 작은 이야기들에 주목해야 한다면 몸과 시간, 공간을 둘러싼 미시적인 갈등과 모순을 정치적 재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몸에 관한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존재(biologically vulnerable being)'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대적 담론체계는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관된 유물론적 사고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런데 근대의 과학주의적 태도는 자연을 기술적으로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한다. 과학주의적 태도가 주름과 부피를 부정하고 매끈한 평면으로 대상을 환원하여 설명하게 되면 모든 대상은 상호연관성이 부정된 고립된 연구대상이 된다.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성은 인간이 자연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을 부정하게 되면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을 인간과 분리해 기술적으로 통제하려 함으로써 존재 조건을 위태롭게 한다. 실재와 괴리된 관념적 과학의 세계, 과학주의적 태도가 지배하는 근대적 담론체계 안에서 인간의 예외적 존재로서의 우월함이 과장됨으로써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생물학적 취약성은 무시되고, 그 결과로 위협은 커진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미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 우리 모두는 나를 타자, 대상으로부터 구분하고 경계지어야 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결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생의 초기에 집중되지만, 평생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리학적으로 불안한 존재'(psychologically unstable being)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성이 기정사실로 만든 고립된 원자로서 존재하는 합리적 주체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불안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합리적 주체는 독립적인 개체이며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정서적 교감을 해야 하는 인간 삶의 기본적 필요를 부정하도록 교육받고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승자독식의 논리를 강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심리적 불안을 극대화함으로써 서로 상호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넣고 있다.

생물학적 취약성과 심리학적 불안정성이라는 인간의 특징은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완화된 수 있다.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만 관리되고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하게 태어난 인간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엄마와 아빠와의 의존과 상호관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의 길에 들어선다. 서로를 격리하고 분절화 하는 노동패턴, 도시계획, 공간구획이 모두 사회적 투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을 잘게 나누어 타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상품화하여 고객과 소비자로 정형화하는 것은 상호의존성의 원리를 부정한다. 결과는 고립된 개인들의 심리적 불안정이 높아지는 것이다. 타자가 가지는 생물학적 취약성에 대해 둔감해지고 타자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

이 공동체를 갈망하고 마을을 만들려 하며, 협동조합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심리적 불안정성과 생물학적 취약함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인 ‘사회적 상호의존성’(사회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socially inter-dependent being)을 정치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의존성은 시간과 공간의 정치, 노동과 여가, 도시공간의 계획, 사무공간의 구조 등 일상의 무수히 많은 주제들을 사회주의 정치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취약하고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회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이기에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실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existentially self-centered being)이다. 세상은 인간 의식 바깥에 ‘언제나-이미’ 실재하지만 인간은 실존적으로 자기의식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반응한다. 상호의존적이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개성과 독특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독특성은 ‘차이들’로 정의될 수 있다.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관계와 공적인 장이 개인을 압도할 때 저마다의 존재의미는 희미해진다. 외적으로 주어진 규범과 규칙에 자기를 맞추고 사회의 부속품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의존성의 토대를 허물어 버릴 정도로 ‘나’의 이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는 정작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행복과 만족은 사라져 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실존적 자기중심성과 공존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인정은 곧 타자가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의 일상은 타자를 경쟁의 상대로만 생각하게 하고, 그 경쟁의 결과는 모두를 소비자, 투자자, 고객으로 정형화함으로써 개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인간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붕괴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제기된 네 가지 인간존재의 특징을 정치의 주제로 삼는다면 인간은 더는 고립된 개인들의 합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인간은 그 자체로 집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다. 개인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하지만,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시간 한계를 넘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한된’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개개 인간이 시간에서 제한되어 있고, 한 세대가 역사적으로 한계지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 지평 안에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제한된 존재이기에 시간의 한계를 넘어 집합적으로 반성하고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당장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는 문명이 성립된 후 인류를 지탱해 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인간존재의 특징을 기반으로 삼아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작은 실천들을 모아내어 정치적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운동의 발전은 모두가 생태적(자연적)으로 배태된 존재로 결코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자각에까지 이르러야 일상의 정치적 주제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암시되었듯이 사회주의의 정치적 역량은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몸, 시간, 공간을 정치화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 몸, 시간, 공간을 사회주의적으로 정치화하는 통로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회주의,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주의”, 『진보평론』 74호, 2018)

5. 2022년에 생각한 다중 위기의 이론적 분석

내적 한계인 신체적 취약성, 심리적 불안정성, 사회적 상호의존성, 실존적 자기중심성은 거시적 모순과 외적 한계에 의해 틀지어진 적대의 선을 따라 정치화되어야 한다. 착취-수탈의 자연적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 생존의 생태적 한계(ecological limits)를 말한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적 존재(natural being)로서 인간이 가지는 비유기체적 신체(unorganic body)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인간은 자연적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대적 세계관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내적 한계로부터의 정치적 계기를 외적 한계의 모순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제시한 자본주의 분석은 ‘가치법칙’의 분석으로부터 ‘잉여가치 착취’의 해명으로 나아간다. 마르크스는 사용가치와 가치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 유용노동과 추상적 노동 개념을 도입한다. 가치는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추상적 노동이다. 당연히 사용가치는 구체적 유용노동에 대응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사이의 교환을 규제하는 것은 구체적 노동-사용가치의 개념쌍이 아니라 추상적 노동-가치의 쌍이다. 하지만 자연적 한계에 대한 인식은 맬서스의 철학적·정치적 보수주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더 많은 화폐로 돌아오는 이윤의 추구이기에 상품의 유용성은 판매를 통해 가치가 실현된 이후 소비자의 일일 뿐이다. 생산의 사회적인 성격은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가치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에서 더 많은 가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해명해야 했다. 그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노동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임금이라는 화폐 형태로 드러나는)를 재생산하는 노동시간을 넘어서까지 노동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의 출처라는 사실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가치,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정의한다.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을 그것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시킴으로써 얻어내는 가치의 증가분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잉여가치의 ‘착취’라고 불렀다. 따라서 자본 축적 동학은 경쟁하는 개별 자본가들이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여기서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나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절대적 잉여가치는 물리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상대적 잉여가치는 기술 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뜻한다. 일시적으로 얻어진 경쟁 우위는 특별잉여 가치로 나타나는데, 기술적 우위를 점한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들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특별잉여가치의 추구과정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잉여가치 착취의 과정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결도 포함한다. 임금, 즉 노동력의 가치(실제로는 가격)를 둘러싼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투쟁으로 자본가는 다루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보다는 기계화의 발전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본가 사이의 경쟁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은 노동과정에서 살아 있는 노동력의 투입보다는 이미 축적된 ‘죽어 있는’ 노동 부분을 크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적 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것은 곧 편향적 기술발전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자본가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자본주의 축적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이 반드시 자본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개입에 의해 주도되고 자본의 대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反)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경향은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자본주의는 항상 ‘역사적’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윤율 저하를 막는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데올로기적 동원이 있어야 한다. 근대 자본주의국가가 항상 민족적 형태를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 조건 속에서 위기는 과잉생산/과소소비, 과잉축적, 부문 간 불비례, 유동성 부족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 중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조건 속에 발생했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결정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치법칙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논증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이다. 마르크스의 정의에서 ‘비생산적’ 노동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노동으로 정의된다. 가치법칙 아래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은 엄청난 논쟁을 불러온다.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사회적 재생산노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유용성, 마르크스의 표현을 따르자면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또는 그것의 표현 형태인 교환가치로 측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자.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한정된 법칙인 동시에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비생산적’ 노동의 영역을 창출하고 관리해야 했다. 가치법칙은 언제나 지불되지 않는 재생산노동(가사노동, 주로 여성의 노동)과 무상이라고 간주되는 자연을 전제로 했다. 자본주의는 가치의 창출(착취)을 위해 그 바깥에 있는 무상의 자원과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해야 한다(수탈)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치법칙은 현실의 사회적 관계와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추상 법칙이다. 이렇게 넓게 보면 가치법칙은 현실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과잉 결정된다. 마르크스의 표현

처럼 “노동력의 가치규정에는 역사적·도덕적[정신적] 요소가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계급 간, 사회 세력 간 힘 대결이 결정적이다. 하인리히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기꺼이 들어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서 계급투쟁이 벌어지게 된다”(원문의 강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노동력의 차별적 가치평가, 그리고 산업예비군이라는 과잉 인구의 형성도 가치법칙 그 자체의 내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가치법칙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재생산노동, 즉 가사노동과 자연적 한계는 이미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가치법칙과 결부되어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연을 대상화하는 근대적 지식체계(재생산노동과 자연을 외부화하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적 계기였다. 제이슨 무어가 착취(가치법칙의 영역)를 가능하게 하는 저렴한 자원과 노동의 공급(프런티어, 즉 수탈)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치법칙을 재해석하고 가치법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가치법칙의 외부, 그리고 그러한 외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사적 개입 형태를 이론화할 수 있다면 마르크스가 제시한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개념도 좀 더 넓게 재정의될 수 있다. 생산양식보다 더 넓은 생존양식(mode of life)의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이 어떻게 경향적으로 관철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순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마르크스에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임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도덕적(정치적) 요소인 계급 간 권력관계(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와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단계의 논의에서 임금은 토지생산성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토지생산성은 식민지 개척에 따른 값싼 식량의 공급 문제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저렴한 상품은 식량을 넘어 노동력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에까지 확장된다. 여기서 저렴한 노동이 이주노동으로까지 확장될 때 제국주의적 외적 관계는 소위 산업화된 나라들의 내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성적 분업에 따른 무상의 재생산노동도 쟁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가치법칙은 현실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과잉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 1권의 ‘노동일’ 장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치법칙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 관리는 민족주의와 성적 분할의 규제를 받으며, 더 나아가 제국주의적 체제 아래에서의 불균등 발전에 영향을 받는다. 가치법칙은 오직 규제적 개념일 뿐이다. 구체적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은 가치법칙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치법칙이 어떻게 변이를 일으키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성차,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노동력의 차별적 가치평가, 그리고 산업예비군이라는 과잉인구의 형성도 가치법칙의 교란 요소, 또는 가치법칙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가치법칙은 내적 모순으로 잉여가치 착취와 경쟁에 의한 경향적 기술적 진보, 그리고 과잉

축적과 위기의 경향을 함축한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외적 조건(가치법칙의 한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의 관철방식을 조건 짓는)과 분리될 수 없다. 저렴한 노동, 자원, 식량을 관리/공급하는 수탈의 외적 조건이 있을 때만 가치법칙은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가치법칙의 외적 조건이 수탈이라면 수탈의 장소는 착취의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투쟁이 발생하는 지점들이다. 우선 착취-수탈의 관계는 사회적 한계를 갖는다. 여성들의 투쟁과 반인종주의적 투쟁이 가장 대표적이다. 20세기 중반이었다면 민족해방 투쟁이 여기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와 연대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는 사회적 투쟁이기도 하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를 따라 노동의 경계를 다시 긋는 투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가치법칙은 그것을 한계 짓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투쟁의 맥아를 담고 있는 외부를 가진다.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그리고 반인종주의적 투쟁이 그러한 맥아들이다. 이제 비판이론은 종별적인 민족국가 안에서 가치법칙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반하는 사회적 투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가 주장하는 탈구와 헤게모니적 실천, 그리고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가 제시하는 구성과 봉기의 변증법에서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사례들을 찾아야 한다. 탈구와 이데올로기적 반역은 새롭게 정의된 필요(needs)개념을 중심으로 탐색되어야 한다. 충족되지 못한 필요는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이 어떻게 신체적 취약성과 심리적 불안정성을 악화시면서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실존적 자기중심성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체험되는 충족되지 못한 필요는 거시적 수준에서 가치법칙과 어긋나는 내적 한계다. 내적 한계가 가치법칙과 어긋나는 지점들이 확인될 때, 그것은 외적 한계의 인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데올로기 투쟁은 생태적 한계와 성차를 착취의 근거로 삼게 하는 가부장제를 변혁하는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주의적 주체의 경쟁 게임-무한경쟁의 신체적 한계와 자본주의 가치법칙”, 『경제와 사회』 134호, 2022)

6. 2024년의 자연주의적 각성

일면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양상불이라는 주장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퍼의 조금은 지나쳐 보이는 인간주의 안에도 이 두가지 생각을 종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소퍼의 철학적 접근을 현실정치로 끌어들이는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대안적 쾌락(alternative hedonism)이 그런 여지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소퍼는 독자들에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소비주의적 쾌락을 얻기 위해 잃고 있는 즐거움을 상상하라고 요청한다. 뒤집어보면 소비주의적 쾌락이 초래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라는 쾌락을 주는 자동차는 공적 공간과 교류, 놀이, 쾌적한 환경을 파괴했다. 사람들은 자동차에 의해 공간을 빼앗기고, 어린이들은 사회적 유대와 연대감을 키울 놀이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린다. 걷는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은 비만과 성인병으로 고통 받는다. 소퍼는 이제 어떤 선택지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인지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소퍼는 대안적 쾌락의 모색을 인간의 독특한 역량, 즉 물질적 조건에 묶여 있지 않은 ‘상상의 힘’에 호소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안적 쾌락은 결국 인간의 신체적(생물학적) 한계(내적 한계)와 지구생태적(자연적) 한계(외적 한계)가 현재의 생산과 소비 방식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지구생태계의 커다란 위기가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관행대로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들고, 자동차에 의존하고, 소비주의적 쾌락에 집착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데올로기적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힘을 깨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한계와 자연적 한계에 대한 호소와 자각이 있어야 한다. 우선 기후위기의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몸이 그 한계를 체험해야 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팬데믹(위협으로 체험된) 위기가 각성의 계기가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수와 가뭄의 체험은 삶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론장의 의제로 올려놓는다.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성장주의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논쟁의 구도는 변경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양상불이기에 인간은 사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구조적 효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정통 맑스주의가 가치법칙, 착취법칙,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론으로 혁명을 예측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착취와 모순의 양상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역사적 운동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힘이다. 그래서 내적(생물학적) 한계에 의해 몸에 각인되는 외적(자연적) 한계를 자각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제 몸과 무의식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구조적 위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한계와 자연적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뿜어내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자연과 몸의 한계와 충돌할 때, 그것이 몸과 무의식의 체험이 될 때 이데올로기에는 균열이 생기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각성이 생겨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양상불’인 동시에 ‘자연적 존재’다. 인간은 기나긴 우발적인 진화의 역사 안에서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와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특한 역사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을 갖는다. 생물학적·자연적 한계는 지배적 관행을 고 나아갈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은 그러한 한계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인식을 추동한다.

(“자연과 사회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인간주의, 포스트휴머니즘, 자연주의논쟁”, 『안과 밖』 53호, 2022)

지금까지 논의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해석은 세계를 실재론으로 바라보면서, 실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민주주의적으로 숙의되는 정치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여기서 실재론적 존재론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전제하고 있는 포스트-휴먼적 전환과 조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만남은 비-환원론적 자연주의(non-reductionist naturalism)로 종합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며, 언제나 관계들의 효과로만 나타난다. 인간은 자연 속에, 비인간 동물종과 사물과의 관계

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만이 이런 포스트-휴먼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 예외적 존재라는 자신감이 계몽주의 시대 인류의 역사적 성취였다면, 이제 인간이 생태적 존재여서 예외적일 수 없다는 반성은 기후위기 시대의 지적 성취이다. ‘지금-여기’의 ‘우리’의 위치를 관계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포스트-휴먼 잡종성은 지구 행성의 생태계 안에서 인간이 갖는 위치를 자연적 존재로 재정의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포스트-구조주의적 반-휴머니즘이나 포스트-휴머니즘의 초-인간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휴머니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휴머니즘, 비-환원론적 자연주의에 기초한 휴머니즘은 몸, 일상의 리듬, 시간과 공간을 모두 정치의 소재로 삼아 근대가 그어 놓은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초월하는 총체적 전환으로 나가야 한다. (“모빌리티 패러다임, 새로운 연구 의제-몸, 자연, 사물의 관계, 그리고 혼종의 세계”, 『탐라문화』 77호, 2024)